

문화자치 - 그 의미와 조건

Cultural Autonomy
- the Meaning and Practical Aspects

김성하
shartpia@gri.re.kr





정책연구 2022-19

문화자치 - 그 의미와 조건

Cultural Autonomy
- the Meaning and Practical Aspects

연구책임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인쇄 2022년 6월
발행 2022년 6월
발행인 송미영
발행처 경기연구원
주소 (1620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화 031)250-3114 / 팩스 031)250-3111
홈페이지 www.gri.kr
등록번호 제 99-3-6호 © 경기연구원, 2022
ISBN 979-11-6853-072-0 93330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경기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본 연구는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자치의 의미와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실천과제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중앙정부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기반으로 수립한 ‘문화비전 2030’, ‘새 예술정책(2018-2022)’,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등의 정책 및 계획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해 사회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가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 중심의 문화발전이 아닌 지역 중심의 문화발전이 곧 국가 문화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중앙집권 문화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경기도의 경우 탐색기(2017~2018), 준비기(2019~2020), 태동기(2021~2022)에 걸쳐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태동기는 2021년 전국 최초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자치 추진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조례에 기반한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등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 실천 기반을 경기도에서 주체적이며 자율적으로 먼저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문화자치 추진 과정은 문화자치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과제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문화정책 및 사업 관련하여 결정과 집행과정에 시민이 주체로서 자율성, 독립성, 책임성을 가지고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주권을 회복하고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이 중앙 혹은 지방정부에 의해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문화자치는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민에 의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문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이 이루어질 때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

다. 지역 중심 문화자치 실천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간 수평적 협력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형식적 행위로서 사무이양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조정, 상시적 정책협력체계 구축과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전문위원회(사회·문화·복지 분야)의 문화분야 전문성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자치는 자치분권의 여러 분야의 사무로써 문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3조(정의)에서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자치분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지역문화를 직접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과정으로서 문화자치라고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자치를 위한 실천과제로 ▲법·제도적 기반 조성, ▲지역문화 재정 발굴·확보, ▲향유의 대상에서 문화주체로의 전환, ▲지역 중심 문화생태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문화자치 관련 법·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문화자치 사업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문화자치 전담기구(조직) 지정·설치, 상시적 정책 협력체계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문화재정 발굴·확보를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확대를 통한 재정 분권 실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재정 조성,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문화재정 확보 등이 필요하다. 향유의 대상에서 문화주체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문화주체 발굴 및 참여 확대 기반 조성, 시민력·문화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인력·생활문화 활동가 등 문화인력 양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역 중심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지역문화 정보 시스템 기초 데이터 구축·운영, 문화자치 정책마켓·정책박람회 개최, 지역문화 매개 전문인력 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

키워드 문화자치, 문화민주주의, 지역문화, 문화주체

제1장 | 서론 _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5

제2장 | 중앙정부 정책 및 계획 _ 7

제1절 법 및 계획 검토	9
제2절 중앙권한이양과 문화자치	17
제3절 문화도시 사업과 문화자치	24

제3장 | 경기도 문화자치 추진 과정 _ 45

제1절 탐색기(2017~2018)	48
제2절 준비기(2019~2020)	53
제3절 태동기(2021~2022)	59

제4장 | 문화자치 의미와 과제 _ 73

제1절 문화자치 의미	75
제2절 문화자치 과제	83

제5장 | 결론 _ 99

제1절 연구요약	101
제2절 정책제언	104

참고문헌 _ 107**Abstract _ 111****부록 _ 113**

표차례

[표 2-1] ‘문화비전 2030’ 의제 6 주요과제	12
[표 2-2] ‘새 예술정책(2018-2022)’ 핵심과제 2 주요내용	14
[표 2-3]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수립 과정	14
[표 2-4] 자치분권 1.0과 자치분권 2.0의 비교	19
[표 2-5] 2005년 문화분야 지방이양 사업 현황	21
[표 2-6] 2020년 문화분야 지방이양 사업 현황	21
[표 2-7] 2020년 지자체별 지방이양 예산	22
[표 2-8]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한 도시문화 관련 사업	25
[표 2-9] 문화도시 지정 현황	27
[표 2-10] 문화도시 사업 추진주체별 기능 및 역할 분담구조 예	37
[표 2-11] 2021년 기준 문화도시별 거버넌스 추진 성과 (1차 법정도시)	41
[표 2-12] 2021년 기준 문화도시별 거버넌스 추진 성과 (2차 법정도시)	43
[표 3-1] 기획회의 운영 현황	51
[표 3-2] ‘GRI 문화예술 정책 포럼’ 개최 개요	52
[표 3-3] 정책 세미나 운영 현황	53
[표 3-4] 시·군 정책포럼 운영 현황	53
[표 3-5] <경기 문화예술, 경기도민에게 묻다> 공모내용	63
[표 3-6] ‘2021년 경기 문화예술 정책축제 권역별 1차 모임’ 주요 결과	64
[표 3-7] 권역별 정책축제 토론회 일정	65
[표 3-8] 2022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안)	67
[표 3-9] (사례) 의정부 문화자치학교 커리큘럼	71
[표 3-10] 양주시 문화자치 협의체 운영일정	72
[표 4-1] 문화자치 관련 조례 제정 현황	87
[표 4-2] 지역문화 성과협약형 포괄보조 방식 도입 방안(안)	89
[표 4-3] 2022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개요	94
[표 4-4] 전남문화기획학교(2022) 개요	95

그림차례

[그림 2-1] ‘문화비전 2030’ 체계도	11
[그림 2-2] ‘새 예술정책(2018-2022)’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13
[그림 2-3]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전략 및 핵심과제	15
[그림 2-4]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전략 1 핵심과제	16
[그림 2-5] 자치분권위원회 명칭 변화	18
[그림 2-6] 문화도시 추진의 비전 및 목표 구성	26
[그림 2-7] 문화도시 사업 지원 주요 내용	28
[그림 3-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2020~2024) 비전, 목표, 전략 ..	57
[그림 3-2] 경기도 문화자치 추진 과정 : 태동기(2021~2022)	59
[그림 3-3] 경기도 문화자치 TF	60
[그림 3-4]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3조(정의)	61
[그림 3-5] 경기도 문화자치 비전 및 전략	66
[그림 3-6] 경기도 문화자치 실행과제	66
[그림 3-7] 오산시 문화자치 : 마을문화 토론방 안내	70
[그림 4-1]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	78
[그림 4-2] 문화정책 흐름	80
[그림 4-3] 문화자치 실천을 위한 사무조정	84
[그림 4-4] 행정 체계와 시민 체질의 변화	84
[그림 4-5] 문화자치 실천을 위한 선결 과제	85
[그림 4-6]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86

01

서론

제1절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문화정책의 주요 방향이 문화의 민주화(Democracy of Culture)에서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문화기본법」(2013)과 「지역문화진흥법」(2014) 제정 이후, 국가 중심의 문화정책이 지역 중심 문화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다.

「문화기본법」이 국민의 기본적인 ‘문화권’(제4조)을 규정하면서 제2조(기본이념)에서 “문화가 민주국가의 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과 창조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문화민주주의로의 지향점을 보여준다. 이는 국가 중심 혹은 전문가 중심의 문화정책이 아닌, 국민 개개인의 기본적 ‘문화권’을 존중하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문화정책의 핵심임을 의미한다. 또한 제3조(정의)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 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 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문화가 특정분야의 부속물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문화자치는 자치분권의 대상으로서 문화가 아닌 주체적 문화, 혹은 문화의 주체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을 통하여 지역 중심 문화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다. 제1조(목적)에서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6조에 근거하여, ‘제1차 지역문화진흥계획(2015~2019)’에 이어, 2020년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수립하면서, 첫 번째 전략으로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과 그 추진과제로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지역문화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함으로써 ‘문화민주주의’에 기반한 ‘문화자치’ 실현에 대한

문화정책 방향의 기초가 보다 명확해졌다.

지역 중심 ‘문화자치’는 지난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문화비전 2030”의 9대 의제 중 하나인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통하여 실질적 정책 현장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서 “문화도시 지정”을 명시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추진되면서 제1차 문화도시 지정(2019)에 이어 제3차 문화도시 지정(2021)까지 총 18곳이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비전 2030” 등을 토대로 국가 문화정책은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문화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앙권한 지방이양이라는 분권과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사무이양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 평가 결과, 여전히 제반여건이 중앙과 공공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지역 및 민간 중심으로의 재편 필요성과 참여 주체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협치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는 지역의 높은 문화자치 및 문화분권 요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이 여전히 미진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2021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이는 ‘문화자치’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법·조례명으로 사용되었으며, ‘문화자치’의 정의를 조례에 포함하고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에 기반한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례를 기반으로 2022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계획에 따라, 5개 시·군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자치를 위한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정책적 추진 사례와 함께 문화자치의 의미와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향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하여 추진해야 할 실천 과제 및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문화자치 추진 현황을 바탕으로 문화자치의 의미와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실천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먼저 중앙정부 문화자치 추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 관련 법을 대상으로 ‘문화자치’와 직·간접적 관련이 있는 법령을 살펴보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수립·발표한 계획에 반영된 문화자치 관련 항목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보고서, 논문 등을 활용하여 문화 분야에서 추진된 사무이양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 중인 문화자치형 사업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 성과평가 자료, 문화도시별 사업계획안 등을 활용해 비전, 추진방향, 추진현황 등 문화도시 조성사업 내 문화자치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법정 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18개 지자체의 주요업무계획, 관련 기사, 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제 추진되고 있는 거버넌스, 주민참여예산 등의 문화자치 사례를 살펴보고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조건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경기도 문화자치 추진 현황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의 제정 시점을 기준으로 문화자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한 탐색기(2017~2018), 문화자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한 준비기(2019~2020),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과 조례에 기반한 문화자치 사업이 추진되는 태동기(2021~2022)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연구원에서 추진한 연구자료, GRI 문화예술 정책 세미나 및 포럼 결과 자료 등, 경기도 내부자료 등을 활용하여 탐색기(2017~2018)와 준비기(2019~2020)의 특징을 살펴보고, 경기도와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에 선정된 5개 시·군 중 3개 시·군(오산시, 의정부시, 양주시)의 사업 주관단체 관계자 인터뷰, 내부 자료 등을 활용하여 태동기(2021~2022)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문화자치 추진 현황을 통해 문화자치의 의미와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조건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02

중앙정부 정책 및 계획

제1절 | 법 및 계획 검토

제2절 | 중앙권한이양과 문화자치

제3절 | 문화도시 사업과 문화자치

제1절 법 및 계획 검토

1. 문화자치 관련 법

2013년 제정된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문화의 가치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정되었다.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적 책무 외에도,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 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기본법」에서는 국민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최초로 명시하였으며, 문화의 정의를 협의의 문화예술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여 문화가 교육, 복지, 환경, 인권과 분리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시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5년 기간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한 부처단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문화융성 비전과 종합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2014년 1월에는 지역문화의 본격적인 진흥을 위해 「지역문화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지역별로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문화국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생활문화와 생활문화시설의 지원 ▲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자문사업단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도시·문화지구의 지정·지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지역문화진흥

기금의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의 수평적 관점이라든지 경제중심주의를 탈피하고자 하는 지역문화의 구상이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등을 거쳐 한단계 나아갔다고 일컬어진다.

2. 문화자치 관련 계획

문체부가 2018년 발표한 ‘문화비전 2030’은 민간이 의제를 주도해 내용을 구성하고 정부가 제안된 정책의 구체화를 지원하면서 완성한 새로운 방식의 정책 비전으로 현장토론회, 포럼, 지역인 집담회 등 8,000여 명이 참여한 소통과 공론의 장을 거쳐 수립되었다.

‘문화비전 2030’은 ‘사람이 있는 문화’를 비전으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의 3대 가치와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의 3대 방향 그리고 9가지 정책 의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37개 주요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2-1] ‘문화비전 2030’ 체계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새문화정책준비단(2018.5.16.).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p.13.

‘문화비전 2030’는 지역 문화는 주민 참여와 자치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본 원리로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민주주의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6번째 의제로 ‘지역 문화분권 실현’을 제시하였다. 의제 6의 주요 과제로는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을 위한 기반 조성’,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 마련 및 계기 제공’, ‘중앙과 지방 간 협치모델 설계’를 제시하였다.

[표 2-1] ‘문화비전 2030’ 의제 6 주요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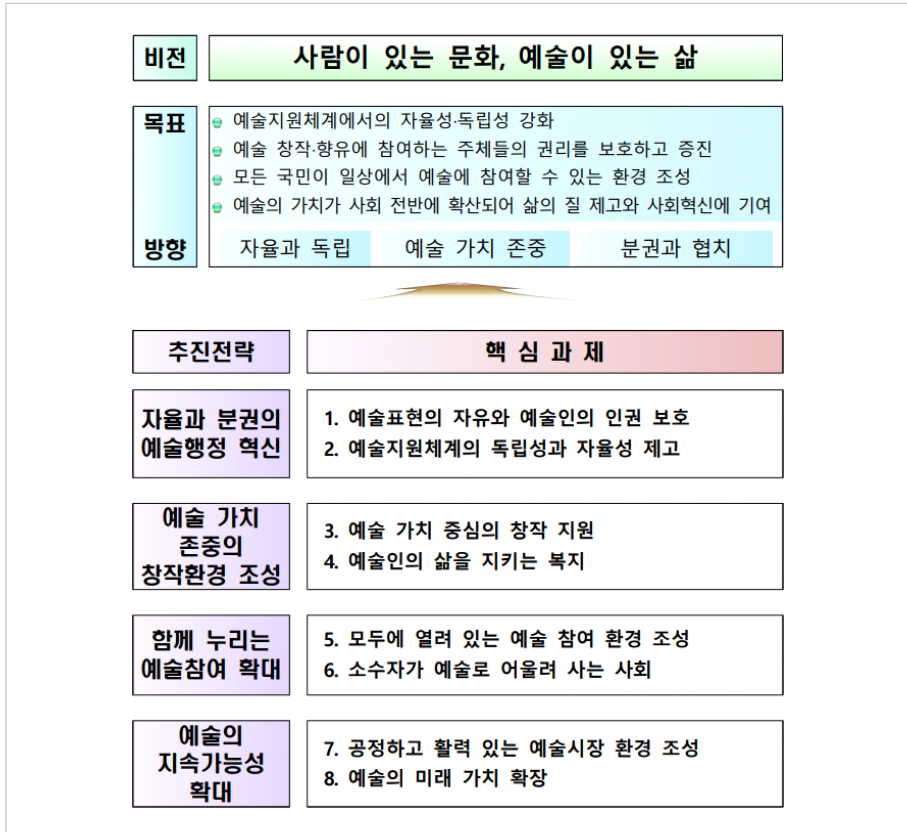
구분	주요 내용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도시 조성)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원 • (관광도시 육성) 도시의 다양한 정체성을 살린 관광 매력도시 육성 • (지역콘텐츠 육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특화 콘텐츠 육성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을 위한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 양성)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활동 지원 • (기관 혁신) 지역 문화기관 위상과 역할 재정립 • (정책기반 구축) 지역문화진흥 관련 정책수립·집행을 위한 문화정책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활성화 • (재원 확충) 지역문화진흥 재원의 지속적 확충(관계부처 협의) • (정보 공유) 지역문화 정보체계 구축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 마련 및 계기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창업) 지역 주민사업체 창업 활성화 지원 • (스포츠클럽 운영) 지역 공동체 확산을 위한 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 (협치 조직) 지역문화진흥법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 (예산 참여) 주민참여 문화예산 제도 지원(관계부처 협의)
중앙과 지방 간 협치모델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협치) 지역문화, 예술분야 협력체계 구축 • (관광 협치) 지역주도형 관광사업 추진할 한국형 지역마케팅조직 설립 지원 • (체육 협치) 스포츠클럽과 지자체·지역체육단체의 역할 정립 • (콘텐츠 협치) 중앙과 지역, 지역 간, 지역 내 협력 체계 구축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새문화정책준비단(2018.5.16.).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pp. 34-39.

‘새 예술정책(2018-2022)’은 지역순회 토론회(44회)를 포함한 160여 분야별·장르별·지역별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민관 협치 구현을 위하여 예술계·학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체부 등으로 구성된 ‘새 예술정책 수립 특별전담팀’을 구성(2017.10~2018.4)해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등 예술계와 정부가 함께 구상하는 숙의형·개방형 계획으로 마련되었다.

‘새 예술정책(2018~2022)’은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 ‘자율과 독립’, ‘예술 가치 존중’, ‘분권과 협치’의 3대 방향과 4대 추진전략, 8대 핵심과제를 5년간의 예술정책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2-2] ‘새 예술정책(2018-2022)’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새예술정책수립특별전담팀(2018.5.16.). “새 예술정책(2018-222)”, p. 10.

이와 같은 정책 기본 방향은 예술인과 국민이 중심이 되며, 예술의 가치가 존중받고 예술로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과제 2 ‘예술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제고’를 통해 예술인·단체의 자율성·자생력 제고 및 지역으로의 확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예술생태계를 위하여 행정의 효율성·책임성 확보, 협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수립-집행-평가 단계별 현장 소통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표 2-2] '새 예술정책(2018-2022)' 핵심과제 2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국민이 신뢰하는 위원회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상과 역할 재정비(자율성·독립성·전문성 강화) 위원장 호선제 도입 및 위원 선임제도 개선 문예기금의 안정적 재원 유입구조 확보 예술 현장과의 상시적 협치적 구조 마련 지원사업 및 조직운영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역할과 기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심의 불간섭, 정부 정책기능 강화 예술 정책 수요를 반영한 지원체계 확립
공공예술지원기관의 공공성 회복과 전문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예술지원기관 미션 및 역할 재정립 예술분야 특성에 맞는 공공예술지원기관장 선발방식 도입 공공예술지원기관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 개발
협치체계 구축 및 법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관 협치에 기반한 정책 협력체계 구축 지역분권 및 자율성 제고 예술 분야 법체계 정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새예술정책수립특별전담팀(2018.5.16.). "새 예술정책(2018-222)", pp. 16-23.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의거하여 문체부 장관이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는 중장기 지역문화 진흥정책으로,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비전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문체부는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 만료에 따라 지역문화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 지역순회 토론회 등을 통해 1차 계획 평가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 과제를 도출, 지난 2020년 2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하였다.

[표 2-3]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수립 과정

구분	주요 내용
1차 계획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전문가 및 현장관계자 참여를 통한 1차 기본계획·시도 시행계획 평가 ('19.5~10월) 및 설문조사 실시(지역토론회 참석자 342명 응답)
기획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성 : 지역문화 정책 전문가, 유관기관, 문화기획자 등 24명 역할 : 기본계획의 방향 제시·신규 과제 발굴 등 정책 논의 (▲ 기본 방향과 과제 내부 토의, ▲ 지역 토론회에 패널 참석, ▲ 각 지역에서 자발적 진행된 포럼 등 각계 의견 수렴·보완을 위한 소위원회 개최('19.11.23~25))
지역토론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개 권역별 토론회 개최를 통해 지역 문화기획자, 유관기관, 지자체, 시민 등 의견을 청취, 실효적 정책 수립에 반영 (약 550명 참석)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0.2).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 p.1.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은 중앙정부, 광역·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등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혜자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 지역의 자율성을 확대하고자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비전으로 자치, 포용, 혁신의 3대 가치, 4개 전략 15개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림 2-3]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전략 및 핵심과제



자료 :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꽃피운다 - 별첨2. 정보그림(인포그래픽)”,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2.10.).

2차 계획은 전략 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이 주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역문화를 진흥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권한을 확대하는 법·제도와 재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전략 2 ‘포용과 소통으로 생활기반 문화환경 조성’을 통해 주민 모두가 누리는 지역문화 시대를 위하여 생활문화, 문화기반 시설 열린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략 3 ‘지역의 개성있는 문화 발굴·활용’으로 지역 고유문화를 보존해 문화적 창조력을 축적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전략 4 ‘문화적 가치로 지역의 혁신과 발전’을 통해 문화도시, 문화지구 등 문화를 통한 지역 혁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문화자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전략 1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법·제도적으로 지자체가 직접 다양한 주체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지원하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재정적으로 기존 지역문화재단의 지정기부금 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소재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문화 기부를 늘리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지자체 대상 공모 사업을 선정할 때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시 가점을 부과하는 방법 등으로 더욱 많은 지자체가 지역 주민의 높은 문화서비스 수요를 반영한 예산을 편성·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지역과 민간의 자율성을 제약하던 개별 공모사업들을 연계·통합하고, 국고보조사업의 실태를 조사해 복잡한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등 구조적인 개선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스스로 통계를 기반으로 과학적인 정책을 분석하고 수립할 수 있도록 기초 데이터의 생산과 활용도 증진하고자 하여 지역별 문화정책·자원·활동 등의 통계를 조사하는 ‘지역문화현황통계(3년 주기, ’14~)’의 주기를 단축하고, 지역문화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수집·관리해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지역문화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림 2-4]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전략 1 핵심과제



자료 :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꽃피운다 - 별첨2. 정보그림(인포그래픽)”,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2.10).

제2절 중앙권한이양과 문화자치

1. 중앙권한 이양 추진 현황 1)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정책 및 계획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표방한 것은 지난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2017.12)한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라고 볼 수있다. '문화비전 2030'이 제시한 3대 가치인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은 「문화기본법」의 핵심가치²⁾이며 이는 기존의 국가 중심의 문화발전에서 지역중심의 문화발전으로 전환을 의미하는 문화자치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비전2030의 발표 이전에 있었던 문화자치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앙권한 지방이양이다.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 함께 중앙부처의 주요 기능을 지방으로 배분하고 분권과 자치를 위한 중앙부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중앙권한 이양의 출발은 국민의 정부에서 비롯되었다. 국민의 정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점에서 1999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및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사무 중 분권과 자치를 위하여 지방정부로 이양할 사무를 검토함과 동시에 중앙부처별 주요 기능을 지방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지방분권은 더욱 강조되었으며, 12대 국정핵심과제로 선정되었다. 참여정부를 통하여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었으며, "지방분권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2003년 4월에 대통령 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 로드맵을 수립하고 기존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통하여 사무이양 심의를 추진하였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되고 '지방분권추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1) 김순은(2021).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35(4):3-36.;

김순은·주희진(2021). "자치분권 2.0의 개념과 주요 특징", 자치분권위원회. pp. 5-6.;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pcad.go.kr/section/content/content.html?PID=role" 참고.

2)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17.12.07.) (재인용).;

김성하 외. "문화자치, 패러다임 전환과 경기도 첫 발", 이슈&진단, No.320(2018.05.09.), 경기연구원, p.4.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촉진위원회’와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통합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였다. 분권과 자치를 보다 강조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을 100대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함으로써, 기존의 ‘지방자치발전위원회’를 ‘자치분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다.

[그림 2-5] 자치분권위원회 명칭 변화



자료 :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pcad.go.kr/section/content/content.html?PID=role" (2022.1.20. 검색).

강순은·주희진(2021)에 따르면 ‘자치분권위원회’ 설치와 ‘자치분권 종합계획(2018.09)’ 수립을 기반으로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되었다. 1991년 지방자치시대와 함께 출발한 자치분권 1.0은 선출직 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관권선거를 예방하고 이를 토대로 여·야간 평화로운 정권교체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 1차적 목적이었다면, 자치분권 2.0은 지난 시기 점진적 발전을 이루어 온 자치분권 1.0의 질적 내용을 보완하여 자치분권의 실질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주권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토대로 상생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시한다.

[표 2-4] 자치분권 1.0과 자치분권 2.0의 비교

구분		자치분권 1.0	자치분권 2.0
의의		• 지방자치의 부활 및 실시	• 자치분권의 고도화
특징 및 평가		• 불완전한 제도 • 2할 지방자치	• 제도의 정상화 • 성숙한 지방자치
주체	주체권	• 단체자치(자치단체가 주체)	• 주민자치(주민이 주체)
	주민발의	• 간접조례발의	• 직접조례발의
	직접참정요건	• 주민직접참정 엄격한 요건	• 주민직접참정요건 대폭 완화
	참여연령	• 19세 이상	• 18세 이상
자치권	근거	• 국민주권의 위임	• 주민주권에 기초
	범위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정	•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 제정 (법률로 위임한 조례 행정입법으로 제한 금지)
	강화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 사전적 자치권 보호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자치사무	• 집권적 사무배분과 협소한 사무범위	• 보충성 원칙과 사무범위 확대 (자치경찰사무, 국제교류사무 등)
재정		• 국세에 의존	• 재정분권을 통한 협력
지위	명칭	• 자치단체(행정적 의미)	• 지방정부(정치적 의미)
	지방의회 지위	• 의견기관의 독립성 미흡 (인사권 종속)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견제와 균형의 정상적 작동)
	주민에 대한 책무성	• 의례적 수준	• 대주민 책무성 강화
기관구성		• 획일적 단일구조 (강단체장·약의회)	• 기관구성의 다양성 수용 (주민투표 통한 변경 가능)
정부간 관계	관계	• 수직적·상하 관계, 경쟁 관계	• 수평적·대등 관계, 협력관계
	중앙-지방	• 지도·감독 등 상하관계	• 협력적 동반자 관계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운영)
	지방-지방	• 상호 경쟁 관계 치중	• 상호 협력관계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특별자치단체 등 협력체제 구축)

자료 : 김순은·주희진(2021). "자치분권 2.0의 개념과 주요 특징", 자치분권위원회. pp. 5-6.

2. 문화분야 사무이양 현황³⁾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직접적으로 제시한 「문화비전2030」은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기존의 중앙집권문화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분권에 기반한 지역문화발전은 지역마다 다른 문화적 고유성에 기반한 문화자치를 통해서 이행가능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의 기본방향을 공유하며 '자치분권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지난 2020년 지방으로 사업이양이 진행되었다. 또한 그 이전인 2005년 참여정부에서도 사업이양이 진행됨으로써, 지금까지 총 2차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추진되었으며, 2020년 통과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기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약칭: 지방일괄이양법)」에 따라 2021년부터 400개 사무가 중앙부처로부터 지방으로 이양된다. 동 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방이양 주요 사무는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 폐관 신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또는 배급업 신고·폐업 신고 등', '지방문화원의 설립과 운영 등'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1항에 따르면, 동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정보람 외(2020)는 해당 사무 중 2005년과 2020년 문화분야 지방이양 사무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05년 24개, 2020년 27개의 사무이양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정보람 외(2020)는 2005년 문화분야 사무이양에 따른 사업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중앙정부 성과 효과성, 효율성이 낮은 소액사업을 이양하고 이후 정책사업에서 보다 규모화, 전략화하는 데 일정 성과"를 거두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창작공간, 문화의 거리조성, 유명예술인 기념물 설치, 지역행사와 기념사업에 대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건건히 보조하던 방식에서 정책의 목표를 강조하여 사업을 규모화한 문화재생사업, 광역관광개발, 지역문화행사지원, 문화관광축제와 같은 정책을 기획하는 변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⁴⁾.

3) 정보람 외(2020). 『지방분권에 따른 문화재정 현황과 정부간 역할분담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제3장 3절 문화분야 지방이양사업 실태(pp. 81-100)를 요약·제시함.

[표 2-5] 2005년 문화분야 지방이양 사업 현황

2005년 지방이양 대상 사업	
• 전통학교문화 전승 보존	•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지원
• 공공도서관 운영	• 지역별 특성화 사업
• 농어촌공공도서관 지원(자료 구입)	• 문화인물 기념사업
• 문화의 집 조성	• 노량해진 재현(공모사업은 제외)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중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	• 문화의 거리 조성
• 문화시설 운영평가 인센티브	• 조선통신사행렬 재현(공모사업은 제외)
• 관리책임자대회	• 근대문인 탄생 100주년 기념
•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	• 예술창작공간 조성
•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 조각공원 조성	• 공주미술제(공모사업은 제외)
• 통영국제음악제(공모사업은 제외)	• 청소년문화의 집(리모델링만 해당함)
• 문화학교 운영	• 청소년상담실 운영

자료 : 정보람 외(2020). 『지방분권에 따른 문화재정 현황과 정부간 역할분담 방안』, p. 82.

[표 2-6] 2020년 문화분야 지방이양 사업 현황

2020년 지방이양 대상 사업	
• 관광지 개발조성	• 지역 전통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문화관광자원개발 조성	•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에 대한 정부지급금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복합문화시설 조성
• 전통한옥체험숙박시설 지원 (시설 개·보수 사업에 한정)	• 전통사찰 보수정비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
• 관광안내체계 구축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안내체계구축 지원사업 제외)	• 제주 태고문화센터 건립
•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 역사·전통문화도시 조성	• 광주공예문화산업 육성
• 문화특화지역 조성	•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지원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문예회관 건립 지원	• 작은영화관 건립
•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 실내영상스튜디오 건립
•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 지역문화행사 지원
	• 지역대표공연예술제

자료 : 정보람 외(2020). 『지방분권에 따른 문화재정 현황과 정부간 역할분담 방안』, p. 82.

4) 정보람 외(2020). p.xi.

정보람 외(2020)는 2020년 지방이양 사무의 경우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지방이양 사업은 총 32개로 분류된다. 이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 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전반적으로 특·광역시 지역의 지방이양 예산이 작고 도 단위의 지방이양 예산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157개, 82,958백만 원), 경상북도(112개, 55,738백만 원), 전라북도(86개, 41,206백만 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7] 2020년 지자체별 지방이양 예산

(단위 : 백만 원, 건)

특·광역시			도		
지자체명	예산액(중앙)	사업수(지방)	지자체명	예산액(중앙)	사업수(지방)
서울특별시	5,135	10	경기도	18,878	68
부산광역시	27,270	51	강원도	18,916	62
대구광역시	16,475	24	충청북도	12,380	19
인천광역시	4,662	16	충청남도	36,491	66
광주광역시	7,323	15	전라북도	41,206	86
대전광역시	2,574	4	전라남도	82,958	157
울산광역시	7,707	7	경상북도	55,738	112
세종특별자치시	733	4	경상남도	31,168	51
			제주특별자치도	24,590	24

자료 : 정보람 외(2020). 『지방분권에 따른 문화재정 현황과 정부간 역할분담 방안』, p. 92.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이양은 단지 사무를 이양한다는 차원에서는 문화자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 정보람 외(2020)는 이러한 기존의 사무이양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사무 혹은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진행되어 실질적인 문화자치에 기여하는 바가 상대적으로 미약할 수 밖에 없었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문화분야 사업의 지방이양 추진 경험은 그간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던 사업기획 및 재정편성 권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역할을 고려한 정책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식의 기틀을 마련하였다”⁵⁾는 점에서 최소한의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

5) 정보람 외(2020). p.102.

결국, 2005년과 2020년 2번의 사무이양이 실질적인 문화자치 추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던 사무를 단순히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22년 5월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중 문화자치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문화 균형발전’에서 제시되고 있다. 새 정부에서도 ‘자치분권위원회’의 ‘중앙권한이양 제1전문위원회’는 문화분야에서 국가사무 배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이양 대상 사무 발굴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⁶⁾.

제1전문위원회는 이전에 있었던 2번의 사무이양에 따른 문화분야에서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문화자치가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창의성에 기반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지 형식적 차원에서 중앙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무가 무엇인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화자치를 위한 사무이양이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검토를 위해 제1전문위원회는 다양한 지역문화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분과를 구성하고, 지역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6) 자치분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s://pcad.go.kr/section/content/content.html?PID=committee>” 참고.

제3절 문화도시 사업과 문화자치

1. 문화도시 조성사업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문화예술의 창의성에 기반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1985년 그리스 아테네를 시작으로 출범한 유럽 문화수도(Europe Capital of Culture)는 문화예술의 창조성을 기반으로 지역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재창출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매년 유럽 회원국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다.

창의성을 중시하는 도시들 간 협력을 촉진하는 프로젝트로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The UNESCO Creative Cities Network)는 2004년에 출범하였다. 유네스코는 창의도시를 통하여 지역문화의 고유성과 창조적 문화활동에 기반한 지역 문화산업의 혁신성으로 지역이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라고 제시한다. 또한 유네스코는 아랍연맹과 함께 1996년 이집트 카이로를 시작으로 아랍문화수도(Arab Cultural Capital)를 매년 선정하고 있다.

그리고 라틴아메리카는 유럽문화수도를 참고하여 2000년 멕시코 메리다를 시작으로 라틴아메리카 중심의 아메리카문화수도(America Capital of Culture)를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도 2014년 한국 광주광역시, 중국 취안저우시, 일본 요코하마시를 시작으로 한·중·일 정부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문화도시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문화도시조성사업이 법으로 규정되어 국가차원의 정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6항에 따르면, 문화도시는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그리고 동 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를 통하여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를 지정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도시조성사업은 그 이전부터 추진되어왔던 거점형 문화도시 사업과 문화특

화지역 조성사업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사업들을 통하여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지역문화진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도시지정을 위한 사업추진이 2018년 시작되었다.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문화비전2030의 3대 가치인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확산하기 위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마련된 것이다.

[표 2-8]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한 도시문화 관련 사업

구분	주요 내용
거점형 문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6~2020년 지방이양 • 역사전통문화도시 : 경주, 전주, 공주·부여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2020년 지방이양 • 2019년까지 누적 81개소(문화도시형 36개소, 문화마을형 45개소) 지원

자료 :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2021.3), p.2.

2) 비전 및 추진방향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문화도시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이라는 비전과 함께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의 4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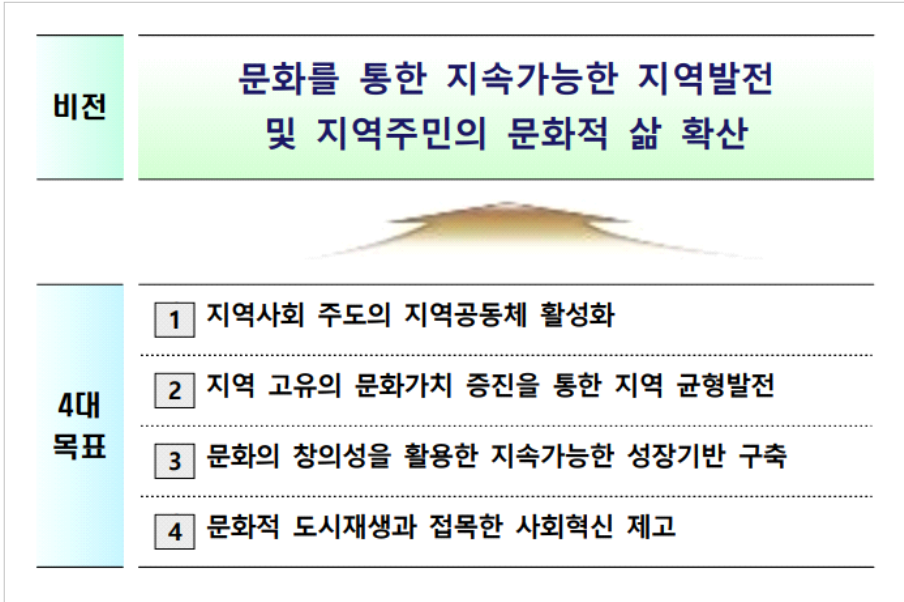
그리고 문화도시 추진방향⁸⁾을 살펴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문화자치가 표방하는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국가 중심의 대규모 문화시설 조성계획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지역문화계획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지역의 자율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문화정책

7)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2021.3), p.3.

8) “22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2022.3), p.4.

이 중앙, 행정, 전문가 중심으로 추진되었다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하여 지역과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 역시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근본적으로 문화자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림 2-6] 문화도시 추진의 비전 및 목표 구성



자료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2021.3), p.3.

3) 추진 현황

2019년 제1차 문화도시(7곳) 지정 이후,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총 18곳이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경기도의 경우, 부천시가 제1차 문화도시로, 수원시가 제3차 문화도시로 지정되었다. 문화도시로 지정되면, 최대 5년간 총사업비 최대 200억원(국비 50% : 지방비 50%) 규모의 지원을 받으며, “문화로 도시를 활성화하는 모든 범위의 문화프로젝트”⁹⁾를 수행하게 된다.

9) “22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2022.3), p.25.

[표 2-9] 문화도시 지정 현황

구분	지정 연도	추진 기간	지정 도시 (가나다순)
제1차 문화도시	'19년 12월	'20년~'24년	부천시, 서귀포시, 영도구(부산),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등 7곳
제2차 문화도시	'21년 1월	'21년~'25년	강릉시, 김해시, 완주군, 부평구(인천), 춘천시 등 5곳
제3차 문화도시	'21년 12월	'22년~'26년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등 6곳
제4차 문화도시	'22년 12월 6곳 지정 예정	'23년~'27년	16개 제4차 예비문화도시 중 6곳 지정 예정

자료 : “제3차 문화도시로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등 6곳 최종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1.12.23.), p.5.

주 : 16개 제4차 예비문화도시는 신규지정('21.12.2) 된 군산시, 군포시, 담양군, 도봉구, 북구(부산), 성북구, 안동시,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창원시 등 11곳, 재지정('21.12.22.) 된 고창군, 달성군(대구), 서귀(인천), 연수구(인천), 칠곡군 등 5곳임.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장소(Hardware), 콘텐츠(Software), 인력(Humanware)의 3분야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인력 측면에서는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 및 지역문화 인력 양성을 통한 문화생태계 구축, 콘텐츠 측면에서는 문화기능 활성화와 지역가치 재발견을 통한 도시 브랜드 창출, 그리고 장소 측면에서는 문화장소 플랫폼 조성 및 원도심 문화재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기반 구축을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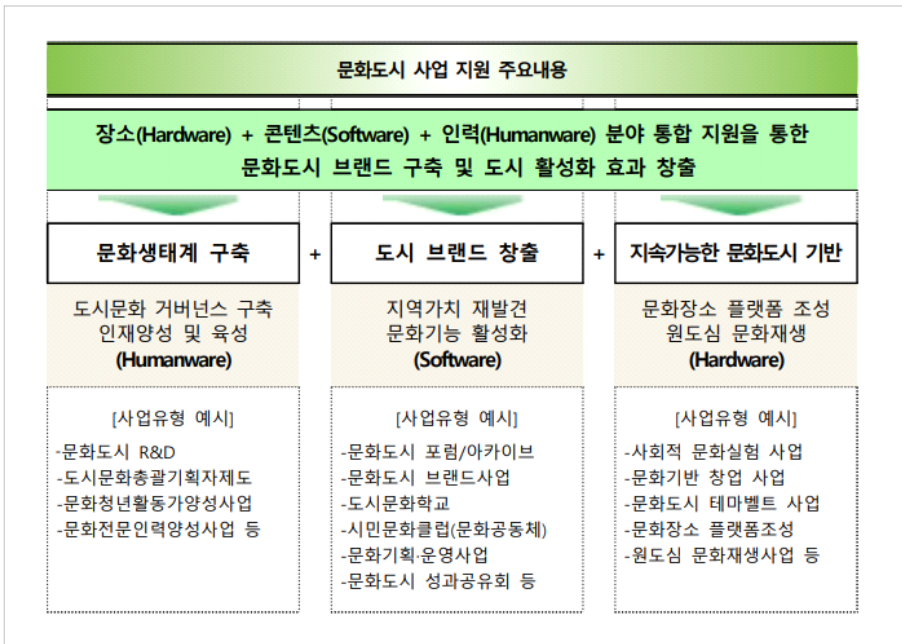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는 2022년 문화도시 성과 확산을 위하여 18개(1차, 2차, 3차) 문화도시 성과 가시화 및 사업추진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성과를 문화도시 박람회(12월), 문화도시-유럽문화수도 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국내외에 공유할 예정¹⁰⁾이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하여 특히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가시적 성과로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 사례로 청주시와 완주시가 제시되고 있는데 청주(1차 문화도시)의 경우, 시민의 자발적

10) 문화체육관광부(2021.12). “2022년 주요업무계획”, p.19.

활동(문화유랑단 프로젝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소외문제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완주(2차 문화도시)의 경우 청년들의 문화형성 사업(작은 성공프로젝트 100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다.¹¹⁾ 또한 문화도시 사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 내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나타내는 ‘문화도시별 문화적 도시재생공간 이용자 수’가 지난 2020년(63,000명) 대비 2021년(127,992명) 약 2배가 증가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도시 활력이 증가함을 예측할 수 있다.¹²⁾

[그림 2-7] 문화도시 사업 지원 주요 내용



자료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2021.3), p.26.

11) 문화체육관광부(2021.12). “2022년 주요업무계획”, p.5.

12) 문화체육관광부(2022.1). “2021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 p.40.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사례

1) 제1차 법정 문화도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제1차 예비문화도시 10곳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였다. 이들 10곳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진행하였고, 부천시, 서귀포시, 영도구(부산),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가 최종적으로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2019.12)되었다. 1차 문화도시의 문화도시 계획 및 추진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부천 문화도시는 15개의 신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협력하여 119개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융복합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¹³⁾. 그리고 문화도시위원회(10명), 시민위원회(1,000여 명), 문화도시협의회 및 워킹그룹 등을 운영한다¹⁴⁾. 특히, 2021년 시민위원 163명이 참여한 시민총회B-정상회담 사업을 통해 시민이 제안한 의제 700여 개, 시민참여예산 사업 3개 선정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다¹⁵⁾. 부천 문화도시는 문화, 예술, 산업이 어우러지는 부천형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예술지원 정책 추진, 마을 공동체 조성, 부천형 사회적 공유기반 경제생태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¹⁶⁾.

문화도시 2년 차 사업추진 성과평가 결과 선도도시로 선정된 서귀포 문화도시 마을 생활권 내 문화공간 및 유희공간을 활용한 문화재생으로 문화 및 교육 서비스 혜택이 저조한 읍·면 마을을 대상으로 지역민의 문화 향유 욕구를 반영한 문화거점 조성 및 발굴을 추진한다¹⁷⁾. 특히 ‘마을라운지’를 발굴하고 협약을 체결한 결과 2020년 29개소에서 2021년 43개소로 증가하였다¹⁸⁾.

13) 부천문화재단(2021.6).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주요업무 추진실적(2020-2021)”, pp.10~11.

14) 부천문화재단(2022). “2022년 주요 업무계획”, p.10.

15)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16) 문화도시 부천 “<http://sweb.smartnm.getthompy.com/subpage.php?p=m13>”, (2022.1.10. 검색).;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부천)문화도시 조성계획(공개용)”, 문화체육관광부(2020.6.4.).

17)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서귀포)문화도시 조성계획(공개용)”, 문화체육관광부(2020.6.4.).;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문화도시 서귀포 “<https://www.nojiculture.kr/introduce/structure.do>” (2022.1.10. 검색).

18)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또한 서귀포 원도심 하영올레, (사)제주올레 협력 감산리 군삼오름 아트간새, 안덕면 사계리 마을회, 콘텐츠그룹 제주상회 등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주체들이 협력하여 노지문화 여행프로그램 상품을 개발하기도 하였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2019년부터 ‘문화원탁’을 통해 시민 150여명이 거버넌스에 참여¹⁹⁾하였으며, 2022년에는 문화원탁을 통해 제안된 사업 중 실현 가능한 사업을 서귀포시 전 부서와 연계·협력하여 추진 예정이다²⁰⁾.

영도(부산) 문화도시는 영도구 봉래동 산업공간을 문화교류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물양장 컬렉션’을 추진하였으며, 주민이 공간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²¹⁾. 도시재생으로 지어진 창의산업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매진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다²²⁾.

시민추진단, 문화도시추진위원회, 행정 실무 협의체, 동 단위 문화마을 거버넌스 등을 구성함으로써 전문가 주도형에서 시민 협력형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도시 거버넌스에서 마을 거버넌스로 확장을 추진하였다. 2021년에는 시민 거버넌스가 주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청학동 조내기마을 노후 담벽 테마벽화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여성기획자 넥스트 스테이지와 협력하여 35건의 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²³⁾.

문화도시 2년차 사업추진 성과평가 결과 선도도시로 선정된 원주 문화도시는 중앙동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사업을 연계하여 아카데미극장테이블을 운영하고 도시정체성 디자인 테이블 및 아카데미 포럼 등을 운영하였다²⁴⁾. 새로운 문화공간 4개소를 조성하고 있으며, 53개 원주테이블, 시민공유플랫폼 ‘원주롭다’ 등을 추진함으로써 시민들을 위한 정보 생산 및 공유 체계를 구축하였다²⁵⁾.

19)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문화체육관광부(2022.1). “2021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

20)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문화체육관광부(2022.1). “2021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 문화도시 서귀포 “<https://www.nojiculture.kr/introduce/structure.do>” (2022.2.3. 검색).

21)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영도구(2021). 『2021 영도구 구정백서』, pp.247~248.

22)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23)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영도구(2022). 『2022 주요업무계획』.; 문화도시 영도 “<http://ydct.or.kr/>” (2022.2.3. 검색).

24)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원주)문화도시 조성계획(공개용)”, 문화체육관광부(2020.6.4.).

25)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문화도시 원주 “<https://www.xn--2j1bz8hx3nt7b.kr/main.php>” (2022.2.4. 검색).

천안 문화도시는 단국대학교 링크+ 사업단과 함께 문화에 기반한 도시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함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지역 대학생들의 문화도시 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천안시 사회문제 우선순위 18개를 도출하기도 하였다²⁶⁾.

문화기업 29개, 지역대학 6개, 타 도시 25개, 민간단체 18개, 유관기관 9개 등과 소통을 확대하고 다각적 교류 및 협력을 추진²⁷⁾하였으며, 민간 소유의 유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는 ‘공간스위치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을 위한 문화도시 워킹그룹 운영, 문화창업 지원 등으로 40개 프로젝트에 112,159명이 참여하였다²⁸⁾.

청주 문화도시는 지역 미래유산 발굴 및 보존을 위하여 기록문화 허브벨트 조성을 추진하고 신규 문화공간 6개소를 조성하였다²⁹⁾. 상생협력 워크숍을 통해 청주시 기록관과 문화도시센터간 협업으로 1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³⁰⁾, 2020년에는 통합형 거버넌스 모델을 운영하였고, 2021년에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자생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함으로써 진화형 거버넌스의 사례를 보여주기도 하였다³¹⁾.

포항 문화도시는 과정형 거버넌스와 네트워크형 거버넌스가 결합된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였다³²⁾. 특히 전문가 그룹인 인문기획위원회를 운영하여 미래가치 확산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고유 문화자산 발굴, 자문·심사를 통한 문화력 강화, 수평적·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등을 추진³³⁾하였다. 또한 포항시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협업을 통해 (구)수협냉동창고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였다.³⁴⁾

26)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2021). “2021 행정사무감사자료”.

27)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28)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29)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청주)문화도시 조성계획(공개용)”, 문화체육관광부(2020.6.4.);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2022). “2022년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p.8.

30)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2022). “2022년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31)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32)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부천)문화도시 조성계획(공개용)”, 문화체육관광부(2020.6.4.).

33) 포항문화재단(2022). “2022년 포항문화재단 주요사업계획”.

34)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2) 제2차 법정 문화도시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1월 강릉시, 김해시, 완주군, 부평구(인천), 춘천시 등 5곳을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하였다. 2차 문화도시의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다.

강릉 문화도시는 마을권 문화활동 확대를 위한 민간 공유공간 공모 및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강릉오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 10개소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있다³⁵⁾. 또한 교사커뮤니티 ‘있다’ 등과 협력하여 21건의 협력사업을 추진³⁶⁾하고, 문화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지원(로컬콘텐츠 랩), 공예·공방 생태계 조성, 건축물 보수 기술자 양성 등을 추진한다.³⁷⁾

김해 문화도시는 김해시 농업기술센터와 협력하여 민관 협의 놀이시설을 조성하고 놀이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³⁸⁾ 그리고 문화도시협의체와 시민협의체를 구성하여 도시문화실험실을 운영하고 도민안전 연구단, 자치경찰, 시민 R&D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³⁹⁾. 지역의 역사문화를 재발견하기 위한 리빙테크 사업으로 지역 손기술가 모집, 지역성을 담은 실용품 기획 및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⁴⁰⁾.

완주 문화도시시는 2021년 1년 차 주요 사업으로 문화현장 주민기획단, 재능공유 클럽 모두 多 클래스, 작은성공 프로젝트 100 등을 추진⁴¹⁾하고, 완주문화공유공간 다:행, 별별 마을회관 등 신규 문화공간 60개소를 조성⁴²⁾하였다. 완주 시민문화배심원단, 대표 없는 회의, 완주문화민회 등 완주군 전체 인구의 1.82%에 해당하는

35)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강릉)문화도시 조성계획(공개용)”, 문화체육관광부(2021.4.8.). ;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 시나미강릉 “<https://sinami.co.kr/sub/culture/culture01.html>” (2022.2.15. 검색).

36) 강릉문화재단(2022).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결산서”.;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37) 강릉시(2022). “2022 주요업무 시행계획”, p.171.; 강릉문화재단 “<https://www.gncaf.or.kr/contents.asp?page=445>” (2022.2.15. 검색).

38)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김해)문화도시 조성계획(공개용)”, 문화체육관광부(2021.4.8.).

39) 김해문화재단(2022). “2022년 주요업무계획”, p.75.; 문화도시 김해 “https://xn-4k0bp8hs5gupibiykgb.kr/html/sub/01_01.jsp” (2022.6.9. 검색).

40) 김해문화재단(2022). “2021 회계연도 (재)김해문화재단 결산서”.

41) 완주군(2022). “2022 군정계획”.;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완주)문화도시 조성계획(공개용)”, 문화체육관광부(2021.4.8.).

42) 완주문화재단(2021). “2021 완주문화재단 연차보고서”.

1,660명이 문화도시 거버넌스에 참여하였다.⁴³⁾

부평 문화도시는 2021년 언더시티 프로젝트, 뮤직플로우 페스티벌, 부평별곳 등의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⁴⁴⁾하고 굴포천 복원·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 등 8건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⁴⁵⁾. 민간협의체(문화두레시민회, 문화두레협의체, 문화도시센터, 부평구문화재단), 의사결정체계(문화도시추진위원회), 공공행정협력 체계 등 거버넌스를 운영⁴⁶⁾한다. 특히 부평구는 문화도시조성기금 전출금(신규, 전액구비) 200백만 원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구현 및 사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매년 2억 원씩 5년간 총 10억 원을 적립하여 '문화도시조성기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다⁴⁷⁾.

춘천 문화도시는 지역 산학협력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 등 3건의 협력사업을 추진⁴⁸⁾하고 실무협의체(도시전환공동체), 시민협의체(문화시민모임 봄바람), 정책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문화도시 조성사업 활동그룹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⁴⁹⁾.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도시를 위하여 춘천 문화DB를 설계하고 춘천시민 문화활동 조사 및 문화지표 조사 등 '10분 안전망 달성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한다⁵⁰⁾.

3) 제3차 법정 문화도시

2021년 12월 수원시,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영등포구, 익산시는 제3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되었고 2022년~2026년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

수원 문화도시⁵¹⁾는 사람을 기리는 마음에 기초한 혁신도시, 사통팔달의 지리적

43)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44)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부천)문화도시 조성계획(공개용)", 문화체육관광부(2020.6.4.).

45) 문화도시부평 "https://www.bpcf.or.kr/ccity/ccity/introduce.asp" (2022.2.17. 검색).

46) 인천광역시 부평구(2022). "2022년 주요업무계획".

47) 인천광역시 부평구(2022). "2022년 주요업무계획", pp.118~119.; 부평시의회(2021). "제247회 202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p.15.

48)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49) 춘천시(2022). "2022 주요업무계획".

50) 춘천문화재단(2022.1). "2022년 춘천문화재단 경영목표".

51)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경기 수원시) 제3차 문화도시조성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22.5.18.).

이점과 개발을 통한 성장도시, 양적 개발을 넘어 내적 성장의 전환도시를 위하여 비전 ‘서로를 살피고 문제에 맞서는 문화도시’와 4개 추진전략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한다.

공주 문화도시⁵²⁾는 ‘스스로 함께하는 시민, 삶을 품은 유산 미래기억도시 공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자치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제도적 기반 조성 및 시민 거버넌스 구축, 문화창조 인력 양성을 통한 문화역량을 강화하고자 한다. 공주 미래유산의 발굴·보존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문화공동체 및 시민문화활동, 아카이빙, 이벤트 등과 효과적으로 연계하고자 하며, 문화플랫폼, 도시재생공간 혁신기지화 등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활용으로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

목포 문화도시⁵³⁾는 1897년 무역개항 번창의 시기인 제1의 개항에 이어 2022년 문화개항을 통한 재도약의 시대를 맞이하여 제2의 개항을 이루고자 한다. ‘새로운 개항 문화항구도시 목포’를 비전으로 문화로 융성하는 글로벌 문화도시를 위하여 문화산업, 문화일자리 창출, 문화시민과 지속가능한 문화도시, 국토의 서남권 문화 허브도시 등을 이루고자 한다.

밀양 문화도시⁵⁴⁾는 ‘삶의 회복 새로운 미래, 햇살 문화도시 밀양’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구)밀양대학 유휴공간을 문화재생으로 시민 캠퍼스를 조성하고 도시공간을 연결하여 문화혁신을 도모하고자 ‘햇살문화 전환캠퍼스’를 추진한다. 햇살문화 전환캠퍼스는 도시공간의 전환, 이웃관계의 전환, 생활방식의 전환, 미래 상상의 전환 등의 기반이 될 예정이다.

영등포 문화도시⁵⁵⁾는 ‘우정과 환대의 이웃, 다채로운 문화생산도시 영등포’를 비전으로 4대 전략을 제시한다. ‘개인의 발견’은 문화도시 주체를 발견·발굴·초대하며, ‘관계의 확장’은 도시 안의 자연, 이웃, 생활권을 연결하는 문화적 활동을, ‘공존과 공생’은 자연과 도시, 사람의 관계성을 회복하며 함께 살아가고, ‘모두의 장소’는 시민참여·실행의 장으로서 문화적 장소 재생을 도모하고자 한다.

52)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충남 공주시) 제3차 문화도시조성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22.5.18.).

53)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전남 목포시) 제3차 문화도시조성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22.5.18.).

54)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경남 밀양시) 제3차 문화도시조성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22.5.18.).

55)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서울 영등포구) 제3차 문화도시조성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22.5.18.).

익산 문화도시⁵⁶⁾는 ‘사람이 보석이 되는, 살고 싶은 문화도시 익산’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4대 추진방향 13개 전략을 제시한다. 4대 추진방향으로 ‘도시와 역사의 재인식’, ‘시민주체 플랫폼 구축’, ‘문화도시브랜드 : 보석문화도시’, ‘문화도시 생태계 구축’을 제시한다.

56)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전북 익산시) 제3차 문화도시조성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22.5.18.).

3.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문화자치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도시가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해 사회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가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2021년 문화도시 사업의 주요 성과로 지역 문화자치 기반 구축, 문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촉진, 새로운 지역문화 거버넌스 창출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문화자치 관련 주요 성과로 볼 수 있는 것은 ‘지역 문화자치 기반 구축’과 ‘새로운 지역문화 거버넌스 창출’일 것이다. 먼저 ‘지역 문화자치 기반 구축’에 대한 성과는 전국 지자체의 39.5%에 해당하는 96개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⁵⁷⁾하였고, 전국 82곳에서 문화도시 조례를 제정⁵⁸⁾하였으며, 지자체 문화정책 투자 확대에 기여(전국 평균 4.7%, 1·2차 문화도시 평균 5.8%)⁵⁹⁾하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새로운 지역문화 거버넌스 창출’ 성과는 지역 주민이 지역문화를 생산하고 누리는 주체로 활동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플랫폼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이다⁶⁰⁾.

문화체육관광부(2022)의 “2022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문화도시 사업추진은 문화도시별로 설치되는 문화도시 추진조직(문화도시센터 등)을 중심으로 도시문화 협치구조에 의한 문화 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 추진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 추진주체는 그 기능 및 역할에 따라 ‘사업추진주체’, ‘사업참여주체’, ‘행정지원주체’, ‘사업지원주체’로 분담하여 추진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곧 문화도시 사업의 주체는 시민이고 행정과 전문가의 역할은 매개자 혹은 촉매자로서 지원주체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의 문화정책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이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운영 과정에 참여하거나 수혜 대상으로 그 활동이 제한되어 있었다면,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통하여 시민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주체가 되어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거

57)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58)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59)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60)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나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등 과정에서부터 참여하고 동시에 실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면서 거버넌스를 주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등 시민의 활동이 보다 적극적이며 주체적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재정 민주주의를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문화자치와의 직·간접적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0] 문화도시 사업 추진주체별 기능 및 역할 분담구조 예

구분	주체 구성		기능 및 역할
사업추진 주체	도시문화 경영 전문조직	문화도시 센터 (문화적 도시경영 전문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센터 문화기획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또는 집단)와 활동가를 축으로 구성하는 정식조직 도시문화경영 전문조직 운영 /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 및 유지 각 프로젝트 기획추진 / 사업예산 수령 / 정산 및 결과정리
		지역단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 내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위원회 도시문화 협치구조에 의한 문화 거버넌스 운영 및 유지 문화도시진행에 대한 전체 정보 공유 및 상호토론과 추진 지원 도시문화와 사회구조 상호 간 연계
사업참여 주체	사업참여 및 실행자	도시 시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아이디어 제안 / 사업 참여(프로그램/행사/교육 등) 공모 및 제안사업의 프로젝트 실행자로서 참여 각 분야 및 사업에서 도시를 움직이는 행동주체로 참여
행정지원 주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기획·조정·관리(중앙차원) 정책사업 성과관리 / 사업예산 지원(국비/인센티브 지원) 사업추진 및 통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 지역 및 권역별 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관리 사업예산 지원(광역 차원의 시·도비 및 행정지원) 통합 협력지원 체계 참여 및 유지
사업지원 주체	전문 지원조직	해당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신청, 예산지원, 사업관리 실시 도시행정적 지원 및 관리 문화도시센터 및 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사업추진협의체와 거버넌스 참여 및 유지
		문화도시 컨설팅단·문화도시 성과평가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컨설팅 및 자문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원 업무 전개 정책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p.20.

문화도시를 행정이나 전문가가 아닌 시민 중심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논의와 협의를 이루어 낼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가

마련되어야 하는데, 실제로 문화도시 추진과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노력들을 확인할 수 있다. 문화도시 거버넌스는 참여주체에 따라 행정협의체, 기관·단체 협의체(유관기관 협의체), 시민협의체, 민관협의체로 구분이 가능하다.

먼저, 행정협의체는 주로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업과 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부서 의견 수렴과 협의 등을 위하여 문화도시 관련 핵심부서로 구성된 협의체이다. 예를 들어, 2021년 12월에 지정된 3차 문화도시 중 수원시의 경우 부시장, 문화체육국장 및 관련 부서장 등 12명으로 행정협의체가 구성되어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주요 시책을 연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⁶¹⁾한다. 익산시의 경우는 국·소·단장을 비롯한 주요 연계부서 과장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행정협의체에서 분과별 그룹회의, 전체회의 등을 통하여 의제를 발굴하고 시민과 협업을 실천한다.⁶²⁾

기관·단체 협의체(유관기관 협의체)는 지역 내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문화도시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각 기관간 연계 협력 지점을 모색하여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2차 문화도시 중 김해시의 경우 김해도시재생지원센터, 김해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김해시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김해시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 연구 및 사업실행을 추진한다.⁶³⁾ 3차 문화도시인 영등포구의 경우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는 영등포 혁신교육센터, 마을자치센터, 사회적경제센터, 도시재생센터, 영등포문화원, 50+센터, 무중력시대, 장애인복지기관으로 지역기관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며 사업 추진시 협력기관으로 이주민친구, 다시함께상담센터 등이 참여한다⁶⁴⁾.

시민협의체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시민이 직접 문화도시와 관련된 도시의 현안과 의제를 논의하고 사업을 제안하는 등 문화도시를 이해하고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61) "수원시, 정부의 3차 예비문화도시 지정에 발맞춰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발족", 한국경제신문(2021.6.22.).

62) "익산시,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사전 설명회", 전북도민일보(2021.3.17.).

63) 문화도시 김해 "http://xn-4k0bp8hs5gupibiykqb.kr/contents/01_company/sub03.html" (2022.5.30. 검색). ; 이영준(2020.10). "[이슈] 문화도시 정책과 문화민주주의", 『문화정책이슈페이퍼』, 부산문화재단.

64) 영등포(2021). "[공유자료] 문화도시 조성계획".

주체로서 역할을 한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려있으며 위원장을 선출하여 운영한다. 1차 문화도시인 부천의 경우 올리브 시민위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천시민 혹은 생활권자를 포함해 지역에 관계없이 문화도시 부천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시민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올리브 시민위원 수는 약 800명에 달한다.⁶⁵⁾ 이들은 도시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문화도시를 만들어가고, 문화도시 정책 결정을 위한 시민분과에 참여한다. 또한 시민총회에서 문화도시 참여 예산 투표도 가능하다.

2차 문화도시 춘천은 시민협의체 봄바람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네이버 카페를 통해 누구나 상시 가입이 가능하다. 문화소식과 정보를 제공하며, 역량강화 및 소정의 활동비 혜택을 제공한다. 2022년 2월 기준으로 총 회원 수는 300명이며 운영위원은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⁶⁶⁾.

그 밖에 포항의 경우 시민문화정책단, 김해시의 도시문화실험실, 부평의 문화두레 시민회, 강릉의 문화민회 및 시민배심원, 수원의 문화도시 시민정담회 및 수원나우어스, 공주시의 문화자치시민회의 및 공주문화 시민디자인단, 익산의 문화도시 익산 시민추진단 등이 있다.

민관협의체는 시민협의체 등 문화도시 거버넌스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공유하고 행정 및 예산 지원, 추진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는 장으로 지역 내 모든 문화도시 관련 거버넌스의 참여로 이루어진다.

참여 주체에 따른 다양한 협의체로 구성된 문화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면서 동시에 시민참여 활성화 및 시민 간 교류·협력을 도모하는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례도 있다. 부천 문화도시의 경우 ‘문화도시 도시플랫폼B’라는 시민참여형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기존의 문화정책 및 사업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단선적 지원방식의 연결을 넘어 자유로운 의견 교류와 상호작용을 촉진하고자 한다. 그리고 청주 문화도시는 시민 커뮤니티 문화 플랫폼 ‘클레이’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지역정보 및 시민 일상 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춘천 문화도시는 시민참여 활성화, 시민 간 커뮤니케이션을 위하여 일종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시민 참여형

65) 문화도시부천 도시플랫폼B “<https://bccp.bcf.or.kr/content.do?key=m2201117570047>” (2022.6.15. 검색).

66) “춘천문화재단, “춘천의 문화 바람은 ‘시민협의체 봄바람’으로부터”, 유교신문(2022.2.24.).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지식공유포럼, 라운드테이블 등을 운영하고 있다.

주민이 직접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문화도시 재정 민주주의 사례로는 부천 문화도시 '시민기획사업(문화참여예산제)', 청주 문화도시 '시민 예산제', 강릉 문화도시 참여예산제 '작당모의', 완주 문화도시 '완주시민문화배심원단' 등이 있다. 그 밖에 지역과 지역간 거버넌스 사례로는 부천, 부평, 영등포 등 지하철 1호선과 함께 성장한 도시의 역사성을 공유하는 지역 간 전철이라는 매개를 기반으로 문화적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거버넌스형 권역협력 프로젝트'가 있다.

문화도시는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로 가는 과정의 중요한 매개이자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삶과 문화에 관련된 정책 결정에서 시민이 문화주체가 되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버넌스를 통해 행정(지자체)과 유관기관, 그리고 시민이 수직적 구조가 아닌 수평적 관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은 문화자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표 2-11] 2021년 기준 문화도시별 거버넌스 추진 성과 (1차 법정도시)

구분	주요 내용 및 성과	주요 사례
서귀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도시 거버넌스 운영 198명 문화도시 전문인력 양성 279명 문화도시 활동시민 1,768명 문화도시 참가시민 6,935명 시민 참여경험(중복 포함) 35.2% 	문화원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11월부터 시민 150여 명 참여, 10개의 주제로 원탁 구성 및 운영 소원탁(문화살롱), 대원탁을 통해 제안한 내용 중 실현 가능 사업을 서귀포시 전 부서와 연계 협력 추진 예정
원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53개 원주테이블 운영(692명 참여) 시민 참여경험(중복 포함) 9.9% 	원주테이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실천형 거버넌스 테이블 2021년 원주테이블이 주도하여 총 17건의 사업 기획·운영 시민공유플랫폼 '원주롭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정보생산 및 정보공유체계로 온오프라인 브랜드 캠페인 운영으로 시민참여 제고 파트너 총 114곳, 파트너 게시물 총 52건
청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 통합형 거버넌스 모델을 2021년 진화형 거버넌스 운영로 발전 시민 참여경험(중복 포함) 7.8% 	워킹그룹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자생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도모 지역 활동가 31명 참여, 네트워크 모임 48회 운영, 역량강화 워크숍 26회 운영 시민 커뮤니티 문화 플랫폼 '클레이' 모바일 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정보 및 시민 일상 기록을 공유하는 모바일 앱 운영
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기업 29개, 지역대학 6개, 타 도시 25개, 민간단체 18개, 유관기관 9개 등과 소통 확대 및 다각적 교류·협력 추진 시민 참여경험(중복 포함) 32.6% 	문화독립 상상플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네트워크, 천안문화도시학교, 시민모니터링단을 통한 문화독립도시 천안 거버넌스 운영 천안 문화도시 C-St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안 문화도시 사업 참여자, 일반 시민, 타 도시 모든 이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의견 공유
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정형 거버넌스와 네트워크형 거버넌스가 결합된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 시민 참여경험(중복 포함) 4.9% 	인문기획위원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도시 포항 전문가 그룹 미래가치 확산 및 공감대 형성, 지역 고유 문화자산 발굴, 자문·심사를 통한 문화력 강화, 수평적·협력적 거버넌스 운영 정기회의 11회, 자문·컨설팅 42회, 인문가차 발굴 프로젝트 2개 등

구분	주요 내용 및 성과	주요 사례
부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도시위원회 10명 시민위원회 986명 문화도시협의회 및 워킹그룹 351명 시민 참여경험(중복포함) 4.4%, 목표 달성도 137.5% 	시민총회B-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위원 163명 참여 시민제안 의제 700여개 숙의 시민참여예산 사업 3개 선정
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추진단(20명),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도시추진위원회, 행정 실무협의체, 동 단위 문화마을 거버넌스 운영 전문가 주도형에서 시민 협력형으로 전환 도시 거버넌스에서 마을 거버넌스로 확장 시민 참여경험(중복 포함) 7.6% 	청학동 조내기마을 노후담벽 테마벽화 조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 거버넌스가 주도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조내기마을 골목길 일부 구간 기 조성된 노후화되고 훼손된 벽화 재정비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pp. 13-54.

[표 2-12] 2021년 기준 문화도시별 거버넌스 추진 성과 (2차 법정도시)

구분	주요 내용 및 성과	주요 사례
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주군문화도시추진위원회(60명), 대표없는 회의(608명), 월간 문화도시(103명), 완주문화민회(118명), 완주군민속의단(276명), 완주시민문화배심원단(135명), 시민추진네트워크(194명), 문화현장주민기획단(166명) 등 완주군 전체 인구의 1.82% 참여 시민 참여경험(중복 포함) 28.9% 	<p>완주시민문화배심원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에 필요한 문화활동을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민이 심의·결정하는 시민주도 의사결정 시스템 문화도시지원사업 중 9개 분야 총 20개 사업 심사, 선정 2021년 기준 20회 운영, 총 135명 참여 완주시민 배심원단 사업만족도 88.9%
춘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무협의체(도시전환공동체), 시민협의체(문화시민모임 봄바람), 정책위원회 운영 시민 참여경험(중복 포함) 4.4% 	<p>도시전환공동체(실무협의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 도시재생, 사회혁신, 마을자치, 협동조합, 창업, 청년, 신중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문화도시 조성사업 활동 그룹 거버넌스로 분야별 지역문화 주체들이 지역 이슈에 능동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추진
부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추진체계(문화두레시민회, 문화두레협의체, 문화도시센터, 부평구 문화재단) 의사결정체계(문화도시추진위원회) 공공행정협력체계(부평구청, 행정협의회) 시민 참여경험(중복 포함) 25.7% 	<p>문화두레시민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평구민이 자유롭게 참여해 도시 의제를 논의하고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민공유테이블 문화두레시민회원 139명 참여 시미회 정기회의 개최(7회) 및 시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1-4천리 프로젝트 수행
강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민회, 미래성장과, 문화도시지원센터 중심축으로 협력체계 구축 전체 인구 대비 5,700명 참여 2.5% 시민 참여경험(중복 포함) 42.0% 	<p>문화민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도시 강릉을 만들어가는 자율적·주체적 시민모임으로 문화도시 의제 발굴 및 과제 설정·추진 역할 현재 운영위원 27명 참여 중,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추진 중
김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도시협의체 및 시민협의체 구성 도시문화실험실 운영 도민안전 연구단 자치경찰 시민 R&D 추진 시민 참여경험(중복 포함) 11.5% 	<p>‘도시문화실험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찾아가는 지역 문화랩 2021년 기준 권역랩 7개 실험실, 의제별 3개 실험실을 운영하여 총 74명 활동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pp. 55-84.

3

경기도 문화자치 추진 과정

제1절 | 탐색기(2017~2018)

제2절 | 준비기(2019~2020)

제3절 | 태동기(2021~2022)

제3장 경기도 문화자치 추진 과정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경기도는 문화자치 추진의 법·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발을 내딛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경기도 문화자치는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국가적 차원뿐만 아니라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 정책의 기본 방향이 ‘분권과 자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기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자치 추진 과정을 단계별로 접근하여 살펴보는 것은 향후 지역문화의 핵심으로서 ‘문화자치’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활성화되는 데 매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경기도 문화자치 추진 과정은 크게 3단계(탐색기, 준비기, 태동기)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탐색기는 지난 2018년 경기도와 시·군의 문화행정, 문화 관련 기관, 시민 영역에서 활동하는 문화 관련 단체 및 문화기획자 등이 한 자리에 모이는 기회 마련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논의와 모임의 정례화 가능성을 탐색하던 시기와 2017년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문화커뮤니티 구성 가능성을 탐색하던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준비기는 2019년에 있었던 GRI 문화예술 정책 세미나 및 포럼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반기 종합계획 수립 과정, 2020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안)이 만들어졌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태동기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가 제정되었던 2021년에 추진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시군/도민 토론회, 경기도 문화자치 TF, 경기문화예술 정책 축제에 이어 2022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으로 분류할 수 있다.

탐색기로부터 시작하여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에 이어 조례에 기반한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문화자치에 대한 지역 및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고 문화자치의 의미와 함께 문화자치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실천과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1절 탐색기(2017~2018)

1. 시군 문화커뮤니티 구상과 가능성(2017) - 광명시 사례

문화자치가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필요조건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그 출발은 국가 혹은 광역지방자치단체보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은 지역에서 문화자치를 더욱 확산시키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경기도에서 문화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여건과 그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차원에서의 가능성과 함께 시·군 차원에서의 가능성을 함께 탐색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는 31개의 시·군이 함께하고 있으며, 이들 시·군의 여건과 지역 특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문화자치를 실천해 나가는 범위와 정도는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며, 각 시·군의 상황에 적절한 문화자치 추진 과정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시·군 별로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31개 시·군 중 우선적으로 한 개 시·군에서 문화자치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광명시에서 광명문화재단이 처음 설립되어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큰 변화와 기대의 목소리가 있었고, 동시에 광명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한 광명시민의 요구가 매우 컸었다는 점에서 광명시가 문화자치를 위한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는 시·군 중의 하나로 의미가 있었다.

마침, 2017년에 『광명시 발전 전략 연구 : 삶의 질 제고를 중심으로』⁶⁷⁾가 진행되고 있었고, 연구의 한 과정으로 (가칭)광명 문화커뮤니티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먼저 광명문화재단, 광명문화원, 광명예총, 광명경실련의 4개 기관과 광명시 미래전략실 및 문화체육과와 함께 2번의 준비모임을 가졌다. 1차 모임(2017.12.19.)에서는 관이 주도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형태의 기존의 문화예술 정책이 향후 행정, 단체, 민간의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참석자 모두 공감하였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주체적으로 지역문화발전을 지속

67) 김성하 외(2018). 『광명시 발전 전략 연구 : 삶의 질 제고를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명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시민중심의 논의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진행된 2차 모임(12.27)에서는 모임의 명칭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처음 ‘(가칭)광명 문화네트워크’에서 ‘(가칭)광명 문화커뮤니티’로 합의를 하고, 최종적인 명칭은 모임이 공식적으로 정례화되고 시민사회로 확장되어 나가면 시민과 함께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광명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단체 및 행정과 시민이 참여하는 ‘(가칭)광명 문화네트워크’의 지속적인 정례모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진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례모임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2번의 준비모임에서 논의되었다. 예를 들어, ‘(가칭)광명 문화네트워크’의 정례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간사를 3개 참여 기관(광명문화재단, 광명문화원, 광명예총)이 분기별로 맡기로 하였고, 정례모임에서 개별적인 문화예술 사업 혹은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성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기존에 3개 기관이 각각 진행해 오던 축제를 2018년부터 연계 협력하여 광명시 전체의 대표적인 축제로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정례모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광명 문화커뮤니티는 구체화되지 못했다. 그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한 단계이며, 이를 통해서 지역에서 문화자치의 출발과 가능성 제고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유의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명확한 원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가시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구심점이 없었다는 점이다. 행정에서의 적극성, 그리고 문화재단, 문화원, 예총이라는 3개 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 등 여러 요인들 속에서 광명문화커뮤니티를 추진해 나갈 구심점이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문화자치에 대한 기대가 동력을 잃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광명시 사례를 통하여 경기도 문화자치 출발을 위해서는 시·군에서 문화자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경기도가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2. GRI 문화예술 정책 포럼(2018)

2017년 광명시에서 있었던 광명 문화커뮤니티의 경험과 함께, 경기도 차원에서 31개 시·군의 문화행정, 문화예술관련 기관 및 단체, 문화기획자 등이 함께 모여 공동의 주제를 논의하면서 다른 시·군의 현안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임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2018년 경기연구원에서 ‘GRI 문화예술 정책 포럼’을 운영하였다.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함께하는 문화자치를 위한 네트워크로서 운영 방향을 제시하면서 문화민주주의, 문화자치,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작은 출발을 시도한 것이다.

2018년 1월 5일 사전모임에 7개 시·군 문화재단과 시·군 산하 연구원 등에서 총 8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포럼의 성격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포럼 주제로 ‘문화자치’와 ‘지역문화’ 등의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서로 확인하였다. 또한 포럼이 문화재단의 모임이 아니라, 행정, 기관, 단체, 시민 모두가 중심이 되는 문화 정책 체계의 Bottom-up 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그리고 포럼의 취지 및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 준비모임을 구성하고 1차 포럼 주제를 ‘문화자치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 관계 및 역할’로 선정하였다. 특히, 포럼 외에, 매월 정례 모임인 기획 회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준비모임(1.23)은 경기도 문화정책과, 경기도의회, 경기문화재단, 시·군 문화재단 및 수원시정연구원에서 총 23명이 참석하였으며, ‘문화자치,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를 포럼 주제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문화자치의 근간이 되는 경기도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대를 위한 포럼으로서 그 결과물을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경기도 문화정체성 및 문화정책 방향에 중요한 기점이 될 수 있는 포럼이 될 것을 기대하였다.

기획회의는 총 10회 진행되었으며, 모임을 정례화한다는 차원에서 매월 셋째 주 화요일 오후 3시 경기연구원 회의실로 시간과 장소를 정하였다. 이는 여러 변동 사항에 따라 회의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하며, 시간이 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경기도 및 시·군 문화부서, 경기도의회, 문화재단(경기도 및 시·군), 경기도문화원연합회 및 시·군 문화원, 경기예총, 경기민예총, 문화기

획자 등이 참석하였다. 포럼 주제 및 일정 등을 논의하였으며, 지역문화전문인력, 문화행정기관 및 문화예술단체의 역할 및 예산 집행 체계, 획일적인 기획사업 공모 방식의 변화, 지역문화 협력 체계 구성 필요성, 예술의 순수성 및 창의성 제고 환경 마련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주제를 자유토론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행정, 예술가, 단체, 문화기획자 등 각자의 다른 입장을 서로 확인함과 동시에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표 3-1] 기획회의의 운영 현황

기획회의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1차	1.16(화) 15:00	경기연구원	11
2차	2.20(화) 15:00	경기연구원	15
3차	3.13(화) 15:00	경기연구원	12
4차	4.17(화) 15:00	경기연구원	12
5차	5.15(화) 15:00	경기연구원	9
6차	6.19(화) 15:00	경기연구원	15
7차	7.17(화) 15:00	경기연구원	13
8차	9.4(화) 15:00	경기연구원	16
9차	10.16(화) 15:00	경기연구원	15
10차	12.18(화) 15:00	경기연구원	21

기획회의를 통해 준비된 포럼은 총 5회 진행되었으며, 1차 포럼은 종합포럼으로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및 시·군 문화부서, 문화재단(경기도 및 시·군), 문화원, 예총, 민예총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여 ‘문화자치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 관계 및 역할’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예술 생태계, 시민 중심 문화예술거버넌스, 문화예술 관련 법 및 조례 내용 개선, 문화자치를 위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역할과 협력 구조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차부터 5차 포럼은 시·군 토론회 성격으로 진행하였으며, 화성(2차), 이천(3차), 부천(4차), 성남(5차)에서 시·군 문화부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 시·군 도서관, 박물관, 문화원, 시민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시·군 소재 대학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를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GRI 문화예술 정책 포럼’은 경기도 및 시·군 문화부서, 문화재단, 문화원, 예총, 민예총, 시민사회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지역문화에 대한 자유로운 논의와 협력을 공유하고 공감하였다는 점에서 문화자치의 실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표 3-2] ‘GRI 문화예술 정책 포럼’ 개최 개요

포럼	일시	주제	참석인원(명)
1차	2.28(수) 14:00	(종합포럼) 문화자치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 관계 및 역할	70여명
2차	3.28(수) 14:00	화성시,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	30여명
3차	5.9(수) 14:00	이천시,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	30여명
4차	9.20(목) 10:00	부천시,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	50여명
5차	12.3(월) 15:00	성남,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 - 문화예술로 지역에서 살아남기	30여명

제2절 준비기(2019~2020)

1. GRI 문화예술 정책 세미나 및 포럼 (2019)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문화자치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및 정책 포럼인 '2018 GRI 문화예술 정책 포럼'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 논제와 지역문화예술 현안을 공유하기 위하여 포럼을 2019년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함에 참여자들이 모두 공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2018년 12월 제10차 기획회의에서 2019년 포럼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2019년은 5개의 주요 정책 주제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를 5회 운영하고 시·군 포럼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총 2회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정책세미나는 경기도 및 시·군 문화부서, 문화재단(경기도 및 시·군), 문화원, 관련 전문가, 문화기획자 등이 자유롭게 참여하였으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한 제1차 세미나에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위한 실천적 방향 논의의 구체화, 공공의 역할을 하는 민간 영역에 지원 확대, 경기도 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논의 구조와 협업 구조 마련, 지역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모델 구축 등에 대한 다양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후 예술인 지원정책에 대한 집중적 토론을 위해 프랑스, 독일, 영국의 예술인 지원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갔다.

[표 3-3] 정책 세미나 운영 현황

세미나	일시	주제	참석인원(명)
1차	1.22(화) 15:00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과제	19
2차	2.19(화) 15:00	예술가 지원 정책과 예술가의 지위	17
3차	3.26(화) 15:00	프랑스의 예술인 지원 정책	17
4차	4.16(화) 15:00	독일의 예술인 지원 정책	19
5차	7.9(화) 14:00	영국의 예술인 지원 정책	17

[표 3-4] 시·군 정책포럼 운영 현황

포럼	일시	주제	참석인원(명)
1차	5.10(금) 15:00	(고양) 지역사회에서 예술가로 살아남기	40여명
2차	10.8(화) 15:00	(과천) 과천, 문화를 그리다	50여명

시·군 포럼의 경우, 상반기는 고양시에서 하반기는 과천시에서 각각 진행을 하였다. 고양의 경우, 고양시 문화부서, 전문가,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기획자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지역사회에서 예술가로 살아남기’를 주제로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방향과 지원체계 변화에 대해 다양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특히, 고양시 내 문화예술 지원을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 정보, 예술인 간 네트워크 등을 위한 예술인 DB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며, 지역예술인 지위와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장, 예술 시장성 제고, 문화협약 제도를 활용한 중앙-광역-기초 간 연계 협력 필요성 등을 논의하였다.

과천의 경우, 과천문화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천시 문화부서, 시민단체, 문화기획자, 전문가, 일반 시민 등 50여명이 참석하여 ‘과천, 문화를 그리다’를 주제로 토론하였다. 특히, 과천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토론에서 재단 설립 및 운영에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특정 장르 예술 지원이 아닌 시민 개개인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지원, 그리고 재단의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 밖에 문화도시로서 과천의 정책 방향으로 관계 중심의 문화가 지역경제활동으로 연계되어 다양한 경로를 통한 부가가치 발생 가능성 제고, 도시 전략과 연계된 문화정책 추진,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관계맺는 과천시 지향, 유관기관 간 소통, 협력을 통한 문화자치 기반 마련 필요성 등이 제기되었다.

2017년에서 2018년 경기도 문화자치 탐색기를 지나며 문화자치 실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 2019년은 경기도 및 시·군에서 문화자치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 서서히 시작되는 준비기로 볼 수 있다. 5번의 정책세미나와 2번의 시·군 포럼을 거치면서, 2018년보다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더 구체적이며 심도있게 진행되었고, 특히 행정의 적극적 참여가 증가하였다는 점이 준비기로서 의미있는 변화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道-시·군 워크숍(2019)

경기도는 시·군과의 정책교류 토대를 마련하고 경기도 문화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소통 창구로서 '道-시·군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2019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道-시·군 워크숍을 개최한다.

상반기 워크숍은 경기도 문화정책과·종무과·문화유산과, 시·군 문화예술 담당 과장 및 팀장이 참여하였으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2020~2024)」에 반영할 의제, 시·군의 실질적 정책 수혜자를 대상으로 시·군을 통한 의견수렴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

하반기 워크숍의 경우, 경기도 문화종무과·예술정책과·문화유산과, 시·군 문화예술 담당 과장 및 팀장이 참여하였으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2020~2024)」 추진 상황 공유, 2020년 예산 및 사업 계획(공모사업, 시·군-道매칭사업 등)을 논의하였으며, 시·군으로부터 건의사항 등 의견제시가 있었다.

경기도와 시·군 문화예술 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경기도 및 시·군 문화정책에 대해 소통하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경기도에 의해 마련되었다는 점은 경기도 문화자치 기반 마련을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로 이어지는 기존의 하향식 문화정책 및 사업 전달체계에서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를 위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매우 크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자치는 행정과 민간영역이 구분되어 작동할 수 없다. 민간영역만 구분하여 시민사회 내 문화자치를 이룬다는 것은 지역문화의 일부분만 문화자치를 추진한다는 의미일 뿐이다. 따라서 행정과 민간이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행정과 행정, 즉 중앙과 광역, 광역과 기초 행정 간의 소통과 협력 체계는 행정과 민간의 협력체계와 함께 융화될 때 비로소 진정한 문화자치의 근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와 소통과 협력체계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道-시군 워크숍'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3.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 수립(2019)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2조 1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5년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문화예술사업의 단계별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동 조례에 의거, 지난 2014년 수립된 제1차 종합계획(2014~2018)이 완료됨에 따라 1차 계획의 실행 결과를 반영한 2차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여 2019년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2020~2024)」을 수립하였다.

2차 종합계획은 국내외 문화예술 여건 변화, 경기도 문화예술 현황, 1차 종합계획(2014~2018) 진단 및 분석, 경기도민 및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계획수립이 추진되었다. 2차 종합계획 수립은 시작부터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를 전제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경기도 문화자치의 출발을 위한 준비과정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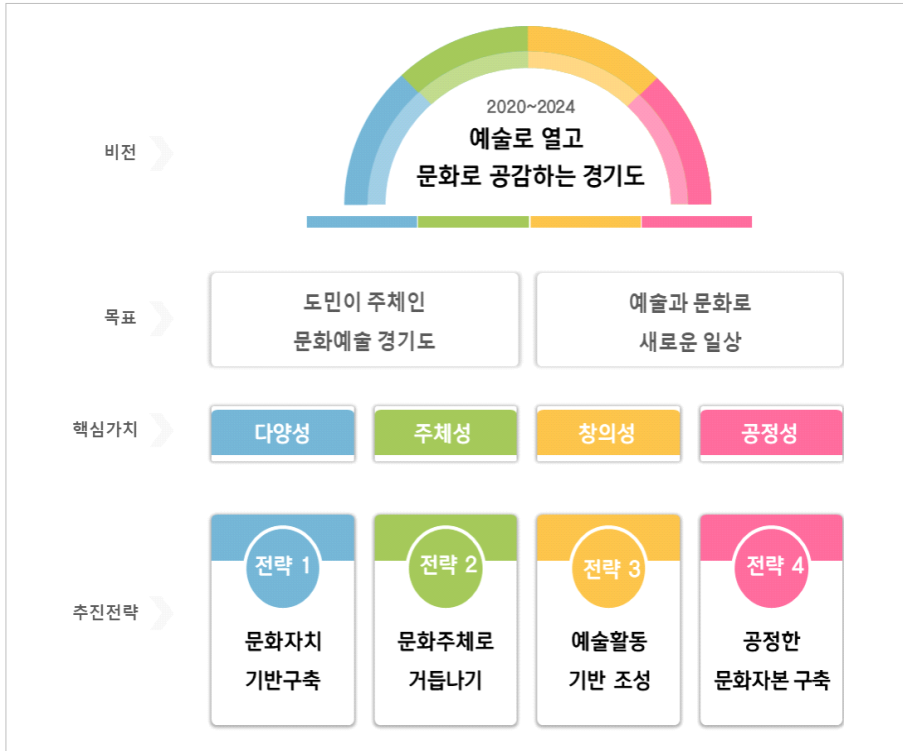
2차 종합계획 수립이 문화자치를 위한 준비과정으로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점은 크게 2가지이다. 첫 번째, 수립과정에 행정의 적극적 참여하였다는 점이다. 경기도 문화관련 부서가 참여하여 연구진과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계획(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이어갔으며, 문화예술교육 관련하여서는 경기도 문화부서와 시·군 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 담당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 ‘道·시·군 문화예술교육 협력 구상 회의’를 총 3회에 걸쳐 진행하였다. 그리고 계획수립이 완료되는 시점에 경기도 및 시·군 문화부서, 문화재단(경기도 및 시·군), 문화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2019.12.13)를 진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계획 수립 시, 행정 담당 부서 의견이 반영되고 논의되는 과정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2차 종합계획 수립에서도 이런 과정을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연구진과 2번의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실행과제(안)의 경우는 담당 부서 실무자와 토론을 함께 진행하며 실행 가능한 과제(안)을 만들어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2차 종합계획의 4대 전략에 ‘전략 1. 문화자치 기반 구축’과 ‘전략 2. 문화주체로 거듭나기’를 포함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실행과제에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이 제시되었고, 계획 수립 이후 경기도에서 조례를 준비하고 제정(2021.7.4)하게 됨으로써, 경기도 문화자치의 출발을 가시화하는 성과를 보여준다.

그리고 ‘문화자치기구 설치 등 법제화 추진’, ‘인문학을 통한 대화하는 문화시민’ 등 문화자치 실천을 위한 다양한 실행과제가 포함되었다.

[그림 3-1]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반기 종합계획(2020~2024) 비전, 목표, 전략



자료 : 김성하 외(2019).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반기 종합계획(2020~2024)』, 경기문화재단, p.183.

4.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안) 준비 (2020)

경기도는 문화가 도민이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의 근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문화기본법」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문화활동 참여 및 문화향유 등 기본적인 문화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에 따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동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도민의 문화권 보장 및 다양한 문화주체가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다.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도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마련, 문화격차 해소 등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례(안)을 준비한 것이다.

조례(안)에 포함될 내용으로 검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존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대신하여 '경기도 문화자치 위원회'를 설치하고 경기도 문화정책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안전별 전문적인 심의를 가능하게 하며, 다양한 문화주체가 적극적이며 주체적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산하에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이다.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31개 시·군 및 예술단체 등 의견 수렴을 거쳤으며, 보다 폭 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2020년 하반기에 공청회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공청회 개최가 지연되었다. 그럼에도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문화자치 관련 조례를 준비하였다는 점은 매우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중앙 정부 및 여러 다른 지자체에서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실천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문화자치 관련 조례를 준비하였다는 점은 향후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문화자치 실천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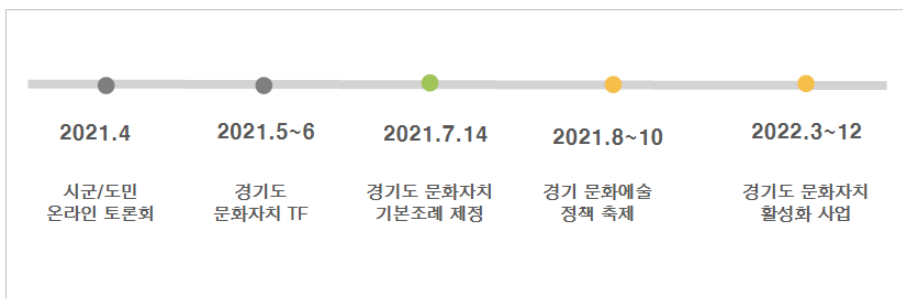
제3절 태동기(2021~2022)

경기도에서 문화자치 실천을 위한 가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태동기는 2021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하여 시·군(4.13) 및 도민(4.14)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2020년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계획하였으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개최하지 못했던 공청회를 대신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시·군 및 도민과 함께 조례제정을 위한 사전 토론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경기도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토론회 자체가 큰 의미가 있거나,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가 결과 이상으로 과정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문화자치 실천을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 문화자치 추진 과정에서 탐색기와 준비기를 거쳐 마침내 문화자치 실천의 첫발을 내딛는 태동기는 2021년 4월 시·군 및 도민 온라인 토론회 이후, 5월에서 6월까지 활동한 경기도 문화자치 TF, 7월 14일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 8월에서 10월 경기문화재단에서 추진한 경기 문화예술정책 축제와 2022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2022.3월~12월)’으로 구성된다.

[그림 3-2] 경기도 문화자치 추진 과정 : 태동기(2021~2022)



자료 : 연구자 재구성.

1. 경기도 문화자치 TF (2021.5~6)

경기도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앞두고, 조례제정 이후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비전과 실행과제 설정의 필요성에 따라 비전수립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행정 중심으로 만들어 내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문화자치의 기본 방향에 따라 행정과 민간 영역이 함께 비전을 수립함으로써 문화자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문화자치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도 문화자치 TF를 구성하여 5월에서 6월까지 총 5회에 걸쳐 토론회와 논의를 진행하였다. TF는 문화재단(경기도 및 시·군), 문화원, 문화예술단체, 도서관, 시민사회(협동조합,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등에서 활동하는 12명과 경기도 문화종무과가 함께 하였다.

TF는 경기도 문화자치 비전체계(안)을 제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문화, 문화시민, 문화다양성, 문화자치 등의 개념 정의부터 논의와 토론을 이어나갔다. 최종적으로 경기도 문화자치 비전을 “자유롭고 다양한 경기문화”로 제안하였으며, 핵심가치로 “행복, 창조, 평등, 협력, 공감, 다양성, 독립성, 지역성”을 제시하고, 문화시민을 “내 삶의 문화를 함께 만들고 나누는 시민”으로 정의하였다.

그리고 문화자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4대 추진전략(문화자치 기반조성, 문화시민 역량제고, 문화협력 활성화, 문화다양성 확산)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조례제정 이후 문화자치 비전 선포식을 통해 문화자치를 실천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림 3-3] 경기도 문화자치 TF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

2.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 (2021.7.14.)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는 ‘문화자치’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조례명에 포함한 최초의 사례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과 「문화기본법」에서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 못한 ‘문화자치’를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법·제도적 차원에서 정의하고 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정책의 핵심 주축으로 점차 강조되고 있는 ‘문화자치’를 이해하고 준비하며 실천할 수 있는 주요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조례 제3조(정의)에서는 “문화”, “문화권”, “문화주체”의 정의를 명시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림 3-4]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3조(정의)

제3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68)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69)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
3. “문화주체”란 도민,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시·군 등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
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자료 : 연구자 재구성.

조례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본원칙 반영,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경기도 문화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

-
- 68) 「문화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문화”란 문화예술, 생활양식, 공동체적 삶의 방식, 가치체계, 전통 및 신념 등을 포함하는 사회나 사회구성원의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를 말한다.
 - 69)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먼저, 경기도 문화정책의 기본원칙으로 도민의 문화권 보장, 문화자치 기반 마련, 협력활동 지원,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6조(도민의 문화권 보장) 1항에서 “도지사는 문화가 인간의 기본적 권리와 존재 가치를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 중의 하나임을 인식하고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제11조에서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 시·군 문화자치 기반 마련 지원, 지역문화 균형 발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항에서 “문화자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이 계획으로 같음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한 제14조(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의 설치)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의2에 따른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도 문화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자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게 된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법정계획으로 5년 마다 수립하는 ‘지역문화진흥 시행 계획’ 및 법정위원회로서 ‘시·도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같음할 수 있는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 및 ‘경기도 문화자치위원회’ 구성을 통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경기도에서 주체적이며 자율적으로 먼저 마련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결국, 조례제정은 문화자치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의 첫 단계로써, 이를 기반으로 향후 문화자치 실천을 위한 과제들의 추진 여부 및 그 성과에 따라 문화자치의 정착 및 활성화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기도의 조례제정은 문화자치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이며 중요한 동력으로써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3. 경기 문화예술 정책 축제 (2021.8~10)

경기도 31개 시군 곳곳에 문화예술로 행복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문화재단은 2020년 국내 최초로 도민에게 묻고 답하는 <경기 문화예술 정책축제>를 개최 하면서, 경기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정책 제안 영상 공모 <경기 문화예술, 경기도민에게 묻다>를 진행하였다.

[표 3-5] <경기 문화예술, 경기도민에게 묻다> 공모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모기간	• 2020.9.18.~10.5 (18일간)
공모자격	• 경기도민 누구나
공모주제 (택 1 또는 모든 주제 가능)	• 일상 속의 문화정책 제안 • 경기도의 특징과 정체성을 잘 담아낸 문화예술축제 정책 제안 • 비대면 시대 문화예술 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 제안 • 내가 사는 동네 문화예술발전 정책 제안
활용계획	• 1등 제안은 향후 제안자 이름을 딴 신규사업명 지정

자료 : <경기 문화예술 정책축제> 정책 제안 영상공모,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20-226호(2020.9.16.). 선정결과 : "<https://www.ggcf.kr/archives/128914>".

경기문화재단은 2020년 ‘경기 문화예술 정책 축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2021년 정책 축제를 문화재단의 단순 행사성 사업 및 연구과제 발굴 형태에서 벗어나,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의 기본 방향에 따라 경기도 31개 시·군, 기초문화재단 및 행정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경기도형 문화정책 개발을 모색함과 동시에 정책 개발 과정과 결과를 도민과 공유하기 위한 ‘2021년 경기 문화예술 정책 축제’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경기도 문화자치 TF’ 참여 경험 및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와 함께 ‘2021 경기 문화예술 정책 축제’를 경기도 문화자치 실현의 한 과정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에 따라,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성하여 2021년 8월 11일과 12일 권역별 1차 모임을 추진한 결과, 5개 권역으로 재조정하고 권역별 정책 축제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표 3-6] '2021년 경기 문화예술 정책축제 권역별 1차 모임' 주요 결과

구분	주요 내용
권역 재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1권역 : 남양주, 하남, 가평, 양평, 광주, 구리, 여주, 이천 • 경기 2권역 : 광명, 안양, 과천, 의왕, 군포 • 경기 3권역 : 김포, 부천, 시흥, 안산, 화성 • 경기 4권역 : 용인, 성남, 안성, 평택, 오산, 수원 • 경기 5권역 : 고양, 파주, 양주, 의정부, 연천, 동두천, 포천
권역별 조직위원회 구성 및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권역 문화재단 및 시군 문화예술과 조직위원회 참여자 추천 의뢰 (경기도 및 경기문화재단 공문 발송) • 권역별 정책축제 추진을 위한 조직위원회 구성 및 위촉 (경기문화재단 공문 발송)

자료 : "2021년 경기 문화예술 정책축제 1차 모임 결과", 경기문화재단 내부자료.

이후, 5개 권역에서 총 50여회 사전 및 준비 모임을 진행하고 지역 현안 및 지역 의제에 대한 토론 및 논의를 거쳐, 10월에 권역별 정책 축제 행사와 함께 10월 26일 '2021년 경기 문화예술 정책 축제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021년 정책 축제는 "분권과 자치, 그리고 문화민주주의"라는 주제와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방안 모색과 경기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미래 정책 의제 제안"을 목적으로 제시하였다.

권역별 행사는 총2부로 구성하였으며, 1부는 5개 권역이 공통적으로 '문화분권과 자치'를 주제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제정 의의 및 주요 내용,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향 및 사업 제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2부는 5개 권역별 지역 현안 및 의제를 기준으로 권역별 주제 토론을 진행하였다. 1권역(10월19일)은 '문화와 기후위기 및 생태문제', 2권역(10월14일)은 '지속가능한 경기문화예술', 3권역(10월18일)은 'with 코로나 새로운 일상', 4권역(10월15일)은 '시민기술과 문화자치, 5권역(10월8일)은 '평화, 기억, 치유'를 주제로 제시하였다. 권역별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하였다.

[표 3-7] 권역별 정책축제 토론회 일정

권역	주제	행사	참여기관
1	문화와 기후위기 및 생태문제	10.19 (화)	광주시문화재단, 구로문화재단, 남양주시문화의집, 양평문화재단, 여주문화원, 이천문화원, 양평문화학교 다올, 하남문화재단
2	지속가능한 경기문화예술	10.14 (목)	광명문화재단, 군포문화재단, 안양문화예술재단, 여우책방, 지역기반예술연구소
3	With 코로나 '새로운 일상'	10.18 (월)	동네봄, 대부도고갯부리섬생태관광마을협동조합, 부천문화재단, 화성시문화재단, 화성문화원
4	시민기술과 문화자치	10.15 (금)	느티나무도서관재단, 대안미술공간 소나무, 도시미래시도, 성남서현문화의집, 성남문화재단, 수원문화재단, 오산문화재단, 용인문화재단, 평택시문화재단, 평택학연구소
5	문화예술이 만들어가는 기억, 치유, 평화	10.08 (금)	동두천생활문화센터, 빛소리친구들, 파주이야기 가게, 포천문화재단,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주지회

자료 : 경기문화재단(2021). "2021년 주요 업무보고", p.50.

권역별 토론회에 이어, 10월 26일 진행된 종합토론회는 “문화자치로 문화자치를 키우자”라는 주제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경기문화재단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협력위원장(온라인 참여), 권역별 발표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 문화자치 비전 “자유롭고 다양한 경기문화 - 내 삶의 문화를 함께 만들고 나누는 시민”을 선포하였다.

비전 선포와 함께, 경기도 문화자치 TF를 통해 제안된 4대 전략(문화자치 기반조성, 문화시민 역량제고, 문화협력 활성화, 문화생태계 다양성 확대)에 따른 총 36개 도민 제안 사업을 제안하였다. 도민 제안 사업은 12개 실행과제에 따른 추진 사업으로 문화자치 TF, 권역별 토론회 준비모임 등을 통하여 제안된 사업 36개로 구성되었다.

특히, 5개 권역별 토론회와 별도로, 31개 시·군에서 문화기획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청년을 중심으로 청년분과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청년분과는 “지역에서 문화로 다함께 행복한 청년”을 의제로 ‘경기도 청년문화예술 자율예산제’, ‘경기도 문화예술 청년 반상회’ 등 8개 실행과제를 제안하였다.

[그림 3-5] 경기도 문화자치 비전 및 전략



자료 : 경기 문화예술 정책축제(2021.10.26.) - You Tube (2022.3.17. 검색).

[그림 3-6] 경기도 문화자치 실행과제



자료 : 경기 문화예술 정책축제(2021.10.26.) - You Tube (2022.3.17. 검색).

4.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2022.3~12)

2021년 경기도 문화자치 비전 선포식 이후, 경기도는 2022년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자치 기반 마련을 위하여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를 추진하였다.

[표 3-8] 2022년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안)

구분	주요 내용	
사업 기간	• 2022.3월~12월	
사업비	• 800백만 원(도비 400백만 원, 시군비 400만 원)	
선정 규모	• 4~8개소 내외 총 800백만 원 • 1개 시·군별 최소 50백만 원 ~ 최대 200백만 원 지원	
공모 대상	• 31개 시·군, 해당 지역 기반 지역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지역사회 주민	
지원 내용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	•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조례 제정 및 협력 네트워크 구성
	문화자치 역량제고	• 문화자치 및 문화시민/매개 인력 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화자치 활성화	• 문화자치 확산을 위한 자율기획사업 지원

자료 : “2022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고문(2022-259)”, 경기도 고시·공고(2022.2.4.); “도,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자치 본격 추진…활성화 사업 시군 공모”, 경기도 보도자료(2022.2.7.).

사업 의미와 필요성⁷⁰⁾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은 “경기도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정책 의지”를 표명하고 “주민 참여형 문화사업에 대한 시·군 수요에 비해 낮은 지원기회”를 해소하고자 추진된다. 특히, 상향식 정책결정으로 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주체적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한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법정 문화도시’에 대한 경기도 시·군의 수요가 많으나 최종 문화도시 지정은 쉽지 않은 과정으로, 2022년 현재 부천시(제1차)와 수원시(제3차), 2곳만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받은 상황이다. (* ‘22년 문화도시 신청 시군 : 10개(용인, 화성, 평택, 안양, 의정부, 군포, 안성, 의왕, 가평, 연천))

70)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2021). “업무보고서”, p.25.

사업 선정 결과⁷¹⁾

지역주민이 직접 문화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해 누구나 소외됨 없이 문화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은 최종적으로 양주시, 의정부시, 오산시, 용인시, 이천시 등 5개 시·군에서 추진하게 되었다. 2022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에 걸쳐 실시될 이번 사업은 시·군과 해당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문화예술 기관과 단체, 지역사회 주민들이 상호 협력하는 민관협력 공동체 구성과 추진에 시·군당 최대 2억 원(도비 1억 원 포함)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 시군은 ▲문화자치 제도적 기반조성 ▲문화자치 역량제고 ▲문화자치 활동 확산 등 3개 분야의 사업을 지역 중심으로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하는 ‘자율형 기획 사업’ 형태로 추진하게 되며, 이들은 공통적으로 관 주도가 아닌 지역 협력단체와 다양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직접 문화자치 활동을 계획하고, 해당 시군과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지향한다.

양주시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 양주’를 목표로, 양주시 문화자치 확산과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문화 주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문화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의정부시는 ‘시민 뜻으로 만들어 가는, 머물고 싶은 도시 의정부’로, 민관이 함께 만드는 거버넌스(협의체) 구축과 시민들이 도시의 미래를 준비하고 상상해 보는 ‘333소셜픽션’ 등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

오산시는 ‘오산 문화자치 프로젝트, 오늘부터 ONE’으로, 주관단체는 물론 협력 단체와 워크숍 등 다양한 채널과 만남의 기회를 가지고 소통하면서 진정한 문화의 주인공은 시민이라는 주제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진행한다.

용인시는 ‘시민기술 생활실험실로 함께 일구는 문화생태계’라는 주제로 사람과 활동을 연결하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 낼 시민 기술을 결합해 개인과 지역의 특성이 발현되는 문화자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천시는 주민자치회 및 지역문화 거버넌스와 협력해 지역성을 살린 문화사업을 제시하고, 지역 현안을 문화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공공예술 및 예술창작 등을 통하여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한다.

71) “‘문화자치 활동, 지역주민과 함께 펼쳐요!’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양주시 등 5곳 선정”, 경기도뉴스포털(2022.3.24.).

사업 추진 현황⁷²⁾

오산의 경우⁷³⁾, 문화재단 내 ‘문화자치 TF팀(팀장 1명, 대리 1명, 기간제근로자 1명)’을 조직하여 ‘오늘부터 ONE’이라는 ‘오산 문화자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산시와 문화재단은 지난 2년간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많은 인력, 시간, 예산을 투입하였지만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아 다소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시 활력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특히 첫 번째 사업으로 추진하는 ‘마을문화 코디네이터’ 1차 모집에 예상보다 많은 총 31명이 지원하였고, 이후 수시 모집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마을문화 코디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아카데미는 자발적으로 평균 1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석자들의 자발성과 열정, 그리고 관심이 점점 늘고 있다는 점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인 ‘마을문화 토론방’ 지원 프로그램은 지역 내 11곳의 협력 카페를 지역별 안배를 통해 선정하여 협약 후 시민들에게 토론 장소(음료와 디저트 지원)를 제공하는 문화정책 토론 활성화 사업이다. 모든 활동은 오산문화자치 블로그(<https://blog.naver.com/cfosan>)에 지속적으로 게재하고 있다.

세 번째 사업은 분야별 4개 협력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오산문화자치 청년실험실, 농촌문화체험, 지역문화발굴 우리동네 문화기획, 오산의 동아리소개 영상제작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독자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협력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오산시 문화부와 함께 조례 개정 및 문화자치 위원회 결성도 진행 예정이다.

현재 오산문화자치 TF팀은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환경을 만들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단기간의 성과보다는 천천히 시간의 흐름 속에 문화자치가 진행되고 그 꽃이 필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속에 있다.

72) 오산시, 의정부시, 양주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주관단체 내부 자료 및 관계자 인터뷰 내용 정리.

73) 오산문화재단 문화자치 TF팀장 인터뷰 및 자료 제공(2022.06.).

[그림 3-7] 오산시 문화자치 : 마을문화 토론방 안내



자료 : 오산문화자치 블로그, “<https://blog.naver.com/cfosan>”.

의정부의 경우⁷⁴⁾, 2022년 제4차 문화도시 예비도시로 선정되어 현재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을 문화자치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문화도시 사업이 지역 브랜드, 지역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산해 가는 사업이라면, 그 토대가 될 수 있는 시민 거버넌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사업으로써 문화자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의정부 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은 문화자치 사업 추진이 문화도시로 가는 기반 사업임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문화도시를 추진하지 않는 도시들도 현재 요구되는 자치의 개념이 도시에 스며들 수 있도록 문화자치 사업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또한 문화자치를 통해 시민주도에서 더 나아가 시민 주체가 될 수 있는 인식의 변화 기회가 생기며, 이런 기회를 통해 행정과 시민의 인식이 궁극적으로 전환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정부는 문화도시 사업과 연계된 문화자치 사업으로 ‘문화자치 학교’를 운영하였으며, 시민네트워크 확대, 시민들이 도시를 스스로 상상하고 제안하는 333소셜픽션, 제안된 시민아이디어를 심화시키는 R&D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문화자치학교 우수 수료 시민들에게 333소셜픽션의 퍼실리테이터, 문화시민 R&D

74) 의정부 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 인터뷰 및 자료 제공(2022.06.).

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문화자치 매개자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화도시지원센터 사무국장에 따르면, 문화자치 사업을 통해 시민네트워크와 참여시민들이 증폭되고 연결되면서 문화도시 시민네트워크 역량 강화와 시민들의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도도 확실히 높아지고 있는 경험을 하고 있다고 한다.

[표 3-9] (사례) 의정부 문화자치학교 커리큘럼

회차	일시	주요 내용	
0회차	5.4(수) 19:00~20:30	오픈 특강	“문화자치는 내 삶을 어떻게 바꾸는가”
1회차	5.14(토) 14:00~18:00	OT	문화자치학교 개강식 및 팀빌딩
		특강	자치와 협치의 이해
2회차	5.21(토) 14:00~18:00	지역조사 방법	지역연구 및 조사 방법론 / 정책 키워드 도출
3회차	5.28(토) 14:00~18:00	정책제안서 작성	정책제안서의 이해, 작성 실습
4회차	6.4(토) 14:00~18:00	퍼실리테이션	마음을 열고 참여를 이끄는 퍼실리테이션 - 퍼실리테이션 기본기 및 도구 학습 - 나만의 퍼실리테이션 기법개발 및 롤플레잉 *5.28. 3차 교육이후 주제토론으로 변경하고 퍼시리테이션 교육을 5차시로 이동
5회차	6.11(토) 14:00~18:00	활동계획 공유	소셜디자이너로서의 활동계획 공유 문화자치학교 종강식 및 수료증 발급

자료 : 의정부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주관단체 내부자료.

양주시의 경우⁷⁵⁾,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전담 인력을 1명 채용하였으며, ‘양주시 문화자치 협의체’를 구성하여 워크숍, 토론회 등을 진행하면서 문화자치에 대한 이해, 양주시 문화자치를 위한 의제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사업 주관단체인 양주 예총은 양주시 문화부서의 참여와 함께 협력단체인 양주문화원, 양주시 장애인 문화협회 외, 양주별산대, 양주향교, 한국국제합창협회 등과 ‘양주시 문화자치 협의체’를 구성하여 양주시민, 문화예술전문가, 양주시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함으로써 관주도가 아닌 시민주도의 문화향유 저변 확대를 지향하고 있다.

75) 한국예총 양주지회 사무국장 인터뷰 및 문화자치 협의체 회의결과 자료제공(2022.06.).

문화자치 협의체 워크숍 및 토론회를 통해, 일부 단체들의 이익 추구가 아닌 양주시민을 위한 문화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특히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문화자치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면서 동시에 시민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추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양주시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은 계획에 따라, 향후 양주시 문화협력단체 네트워크 구축, 문화자치 벤치마킹,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화자치 큐레이터 양성, 문화시민 교육프로그램 및 교류 협력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예정이다.

[표 3-10] 양주시 문화자치 협의체 운영일정

회차	일시(예정)	논의 내용
1회	6.09(목) 10:00	문화자치 핵심개념 워크숍 및 협의체 구성
2회	6.23(목) 14:00	협의체 구성과 운영안 및 양주시 문화예술 현황
3회	7.07(목) 14:00	양주시 문화자치 조례(안) 논의
4회	7.28(목) 14:00	협의체에서 추후 협의
5회	8.11(목) 14:00	협의체에서 추후 협의

자료 : 양주시 문화자치 협의체 내부자료.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5개 시·군 중 2022년 6월 기준 사업 현황 관련 인터뷰 및 자료 제공이 있었던 오산, 의정부, 양주의 공통된 변화는 행정과 민간이 자연스럽게 만나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 깊은 논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문화자치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으며, 민관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성격의 협의체 및 위원회 구성 및 자율적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문화시민으로서 지역문화의 주체로 거듭나기 위한 긴 여정에 적극적이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의 가장 큰 동력으로써 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D4

문화자치 의미와 과제

제1절 | 문화자치 의미

제2절 | 문화자치 과제

제1절 문화자치 의미

1. 문화민주주의의 실천

19세기 말을 시작으로 20세기에 접어들며 인류는 ‘근대국가’를 탄생시키고, ‘민주주의’라는 제도를 화두에 올렸다. 그리고 근대사회 혹은 근대국가라는 모습을 갖추며, 이전의 신분제를 혁파하였다. 프랑스는 브루조와(Bourgeois)라는 시민계급을 중심으로 왕정을 무너뜨리는 ‘혁명’을 역사의 페이지에 남겼고, 이후 20세기 민주주의 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반면 한국은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하여 조선 왕조가 해체되었고 프랑스와 달리 아래로부터 혁명을 이루어내지 못함으로써 주체적인 국가와 민주사회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해방과 함께 한반도에 던져진 이념대립의 폭풍 속에서 미국과 소련이라는 또 다른 외부 세력 개입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전쟁까지 치르는 뼈 아픈 역사로 시작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긴 시간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와 많은 희생으로 성숙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난 촛불혁명을 계기로 한국민주주의는 한층 더 발전했다는 평을 받는다. 그러나 진정한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 성숙해야 하는 과정으로서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것이지, 결코 완성 혹은 완결되는 결과로서 민주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즉 촛불혁명으로 한국민주주의가 완결된 것이 아니다. 한국민주주의는 여전히 성숙을 위한 과정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숙을 위한 과정으로서 민주주의의 중요한 한 축이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밝히고 있다. 국가란 즉 정부는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것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정부는 다양한 국민의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야 하는 것이지, 국민을 지배하거나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국가의, 정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고 국민 주권 보장을 위한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을 비전으로 제시한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2017.10.26.)하였다. 비전과 함께 제시된 5대 핵심전략 중 눈에 띄는 것은 ‘자치 단체의 자치 역량 제고’,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계 구축’, 그리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이다. 이를 통하여 ‘자치분권’의 핵심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권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 혹은 독립성 강화일 뿐 아니라, 주민 개개인이 일상의 삶을 정치적 영역으로 연결하면서 독립적이며 주체적 시민으로 거듭나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서서히 발전되어 온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 영역에서 ‘자치’를 전제하고 있다. 즉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이다. “단체자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기관에 의한 자율성(지방분권)에 기초를 두는 반면, 주민자치는 지역주민 스스로 그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⁷⁶⁾ 따라서 지방자치가 진정한 의미에서 성숙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체자치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가 성숙되어야 한다. 지역에 대한 행정 및 재정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졌을 때 단체자치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주민이 지역행정의 주체가 되었을 때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자치는 앞서 언급한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자치와 분권’을 국정 운영의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강조한다. “문화비전 2030”을 통하여 ‘사람이 있는 문화’라는 비전과 함께 3대 핵심가치로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3대 가치는 「문화기본법」의 핵심가치로 국민의 문화적 권리를 표방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문화행정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문화적 주권 역시 국민에게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그리고 9대 정책의제 중 하나로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포함하고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76) 손상식,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서울법학, 2017-02 24(4):91-133, p.95.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240면 참조 /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은 자치단체의 보장, 자치기능의 보장 및 자치사무의 보장이고, 우리 헌법상 자치단체의 보장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포괄하는 것”이라고 한다. 헌재 2006.2.23. 2005헌마403, 판례집 18-1상, 320, 334. / (재인용) 손상식, 위의 글, p.95.

「문화기본법」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 목적으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4조(국민의 권리)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고 한다. 따라서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국민이 문화권을 행사하기 위해 문화예술영역에서 정부와 시민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은 문화자치를 실천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문화 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문화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결정과 집행과정에 시민이 주체로서 자율성, 독립성, 책임성을 가지고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주권을 회복하고,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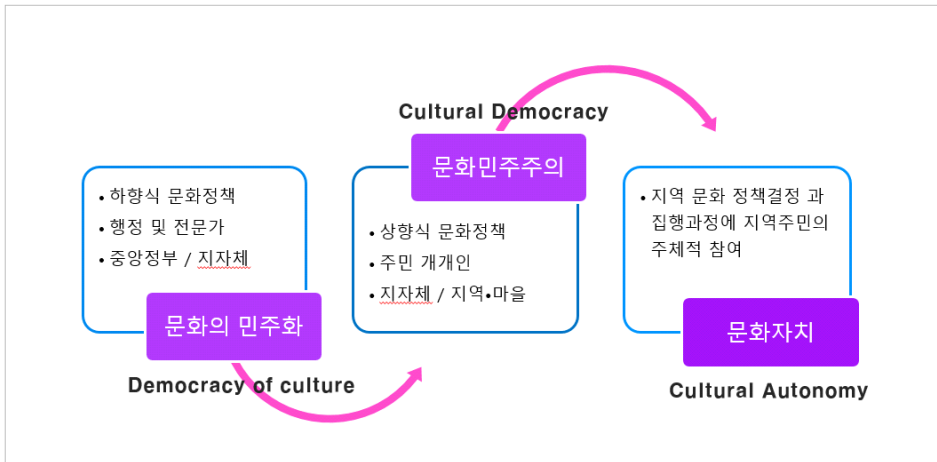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는 기존의 문화정책과 180° 다른 철학이며 문화정책 방향이다. 전문가 혹은 행정 중심의 하향식 문화정책 방향을 포함하고 있는 문화의 민주화(Democracy of Culture)와 달리 시민, 즉 개인 한 명 한 명의 기본적 문화권리가 주체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 개개인 중심의 상향식 문화정책을 표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결정과 집행이 더 이상 행정 중심적 효율성에 의해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행정 및 문화전문가 중심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혹은 지역으로 문화의 중심이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화의 민주화로부터 문화민주주의로의 전환과 발전은 프랑스 문화정책 역사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프랑스 초대 문화부장관 앙드레 말로(Andre Marleaux)로부터 출발한 문화의 민주화는 문화부장관 잭 랑(Jack Lang)이 “1982년 5월 10일 시행령을 통해 문화부 과업의 방향을 수정”하면서 “기존 문화정책의 중심적인 축을 구성하고 있던 앙드레 말로의 상징인 ‘문화의 민주화’가 삭제”되면서 ‘문화민주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⁷⁷⁾ 잭 랑은 현대적인 의미에서 프랑스 문화정책의 새로운 장을 연 인물로서 1981년 11월 17일 국회 연설에서 문화에 대한 개념과 문화정책의 골자를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낸다.⁷⁸⁾

77) 김선미·최준식, 『프랑스 문화정책 준거의 발전과 문화의 민주화』, 인문학연구, 제21호, 2012, p.150.

문화는 사람들의 고통이나 고민과 무관하게 멀리 떨어진 성체에 갇혀있을 수 없다. 문화는 바로 생활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문화는 어느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또한 한 부서, 하나의 계층, 하나의 도시, 한 분야의 소유물도 아니다. (.....) 우리의 문화정책을 두 마디로 요약해서 나타낸다면, 창작과 지방 분산화이다.⁷⁹⁾

결국 문화는 국가 혹은 중앙정부, 나아가 지방정부에 의해 통제될 수 없으며, 특정 계급에 소유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이 중앙 혹은 지방정부에 의해 획일적이며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문화민주주의는 다양한 지역에서 각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역 주민들에 의해 문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그 지역적 특성이 반영될 때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지역 주민이 지역 문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게 되며 이는 곧 문화자치의 실천이기도 하다.

[그림 4-1]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



자료 : 연구자 재구성.

78) 진인혜.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 한국프랑스학논집, 59, 2007.8, p.313.

79) *Les politiques culturelles en France*, 384-387쪽 (재인용, 진인혜, 위의 글, p.313).

2. 지역문화 자율성

국가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방향과 철학의 전환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및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면, 두 법을 통하여 강조되는 것이 ‘지역문화’의 자율성이다. 국가 중심의 문화발전이 아닌 지역 중심의 문화발전이 곧 국가 문화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지역문화의 자율성이 국가 문화정책에서 고려되기 시작한 것은 두 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1990년대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지난 1998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새 문화정책>을 발표⁸⁰⁾하면서 10대 중점과제 중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간 균형발전 및 사회통합 추구”를 제시한다. 국가 문화정책에서 지역이 고려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민의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⁸¹⁾는 “팔길이 원칙”을 중요 정책기조로 제시한다. 그리고 참여정부에 들어 오면서 “자율, 참여, 분권”⁸²⁾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문화정책 방향도 국가 중심에서 지역으로 더욱 확대된다. 원도연(2008, p.168)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 문화분권을 대표하는 두 가지 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른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매년 150억 원의 예산 지원이 있었던 지방문화 산업기반 지원과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다.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예산지원으로 국가 문화정책 방향이 지역으로 그 중심을 옮겨가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에 “지역문화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문화정책관이 신설되고,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문화비전 2030 : 사람이 있는 문화”가 문화정책을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전환을 명시하고, “새예술정책 (2018~2022) : 사람이 있는 문화, 예술이 있는 삶”의 주요 추진 전략으로 ‘자율과 분권의 예술행정 혁신’이 제시되고 있으며, 2019년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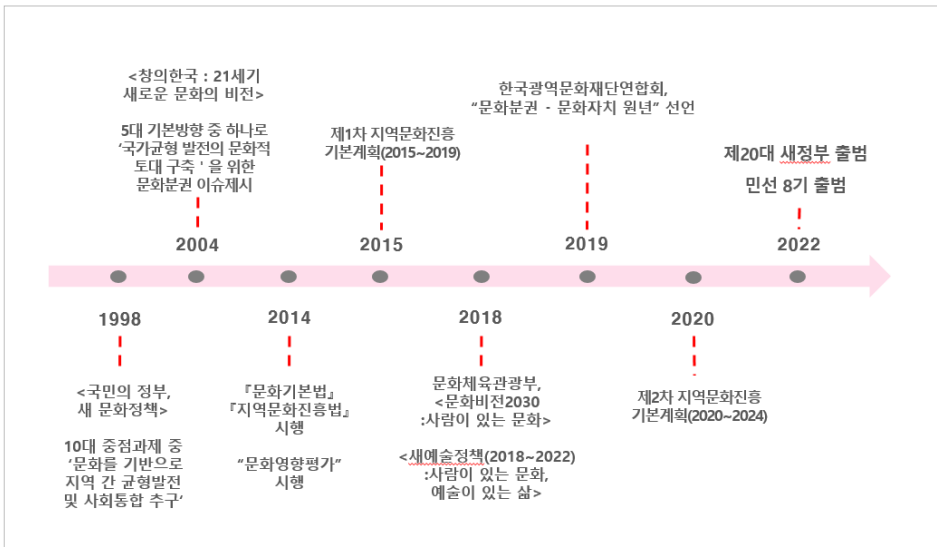
80) 1998년 1월 20일 “국민의 정부의 <새 문화정책> 발표” 보도자료 / (재인용) 원용진.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문화과학사, 1999, p.192.

81) 원도연.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의미와 차기 정부의 과제”, 경제와 사회, 2008년 가을호, p.157.

82) 원도연. 앞의 글, p.163.

화분권·문화자치 원년”을 선언(2019.2.28.)하였다는 점에서 지역문화, 문화분권, 문화자치의 중요성이 점차 더욱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약속11. 문화공영으로 행복한 국민, 품격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를 통하여 문화분야 국정과제 7개(관광, 체육 포함)를 제시한다. 그 중 “56.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과제 추진을 위한 주요 내용에 “문화자치로 지역문화 균형발전 실현”을 제시함으로써 문화자치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2] 문화정책 흐름



자료 : 연구자 재구성.

국가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문화정책 방향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여겨지는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5년 ‘문화로 행복한 지역 창조’를 비전으로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을, 2020년 2월에는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비전으로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⁸³⁾을 발표한다. 2차 계획의 핵심가치는 ‘자치, 포용, 혁신’이며, 특히 ‘자치’와 관련하여 ‘전략 1. 시민의 참여로 문화자치 생태계 구축’과 이에 따른 핵심

83) 문화체육관광부(2020.2.).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과제로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 ‘지역문화 재정 확충’, ‘지역문화 협력체계 개선’, ‘지역문화 역량 강화’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지방’이라는 용어가 중앙 혹은 중심에 대한 주변부라는 의미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문화’가 아닌 ‘지역문화’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문화체육관광부, 2020, pp.7~11)에 따르면 ‘지역문화 자치기반 구축’을 위해 “지역의 자율적 정책추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기반 조성”을 제시한다. 특히 지역문화진흥 계획 수립을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 계획 수립이 아닌, 국가·지자체(광역시·기초)·지역문화기관·주민 등 다양한 주체들 간 유기적 소통을 통한 양방향식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의 수립”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일방적 계획”이 아닌 “양방향식 계획”으로의 전환일 것이다. 기존의 국가 중심의 일방적 계획을 지양하고 지역과 소통을 전제로 “양방향식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문화자치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점이다. 그러나 지역 중심의 문화자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양방향식”이 아닌 “상향식 계획”이 반드시 검토되고 실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차 계획에서 “상향식 계획”이 아닌 “양방향식 계획”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르면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군·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시·도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군·구에서 시·군·구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체계로써 국가 중심의 가장 전형적인 top-down 방식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 과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의 하향식 계획 수립 과정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광역지방

자치단체 그리고 중앙정부로의 계획수립이라는 상향식 계획 수립 방법은 법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법에 따라, 최대한 지역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지역의 문화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의 방법으로 “양방향식 계획” 수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역 중심의 문화자치를 실천한다는 의미는 국가가 만든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여건과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시·군·구에서 먼저 ‘시·군·구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도에서 ‘시·도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시·도 지역문화진흥계획’을 토대로 국가 단위의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혹은 중앙정부가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에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다시 그 아래에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며 가장 아래에 마을이 있는 일반적인 수직적 위계 구조에서는 지역이 중심이 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만들어가는 지역중심 문화자치 실현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화자치는 문화분권과 함께 문화민주주의의 실천이며 주체적 지역문화 생태계 조성을 지향한다. 이는 주민이 주체가 되는 지역문화를 의미하며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의 수평적 협력구조를 전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지역문화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담아내는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한 “상향식 계획” 수립을 규정하는 것이 문화자치를 실천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

제2절 문화자치 과제

1. 문화자치 실천 선결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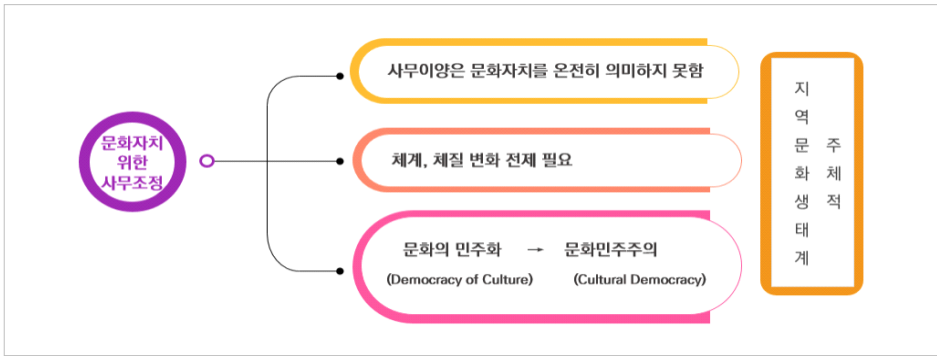
단순 사무이양이 아닌 문화자치 실천을 위한 사무조정

국가 문화정책의 기본 방향이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 자치분권위원회 소속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이양 사무 발굴 및 사무이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 이양 자체가 문화자치를 의미하고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무 이양을 통한 문화자치보다는 문화자치를 실천할 수 있는 사무조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문화자치를 온전히 실천할 수 없다. 중앙정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것은 행정 단계 간의 사무 이양이지, 실제로 해당 지역이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사무인지에 대한 검토 및 그 결과가 이양되는 사무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무 이양을 통한 문화자치가 아니라 문화자치를 위한 사무 조정은 중앙정부의 기존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에 앞서 지역문화의 고유성을 기반으로 지역이 필요로 하고 지역이 요구하는 사무가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지역에 맞는 사무 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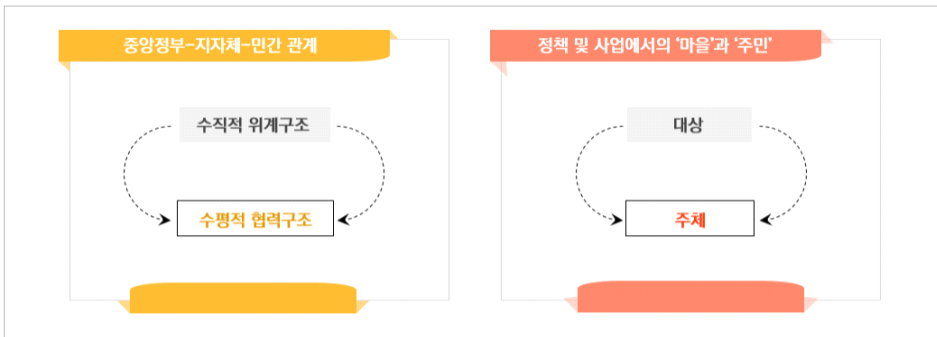
이러한 사무 조정은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이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사무를 조정하여 이양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문화의 민주화(Democracy of culture)에서 문화민주주의(Culture Democracy)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행정 체계와 시민의 체질이 변해야 한다. 즉, 중앙정부-지자체(광역-기초)-민간으로 이어지는 행정 체계가 수직적 위계 구조에서 수평적 협력체계로 변화해야 하며,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마을'과 '주민'은 정책 및 사업의 대상이 아닌 주체로서 변화하고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림 4-3] 문화자치 실천을 위한 사무조정



자료 : 연구자 재구성

[그림 4-4] 행정 체계와 시민 체질의 변화



자료 : 연구자 재구성.

중앙-지자체(광역-기초) 정책 협력체계 구축

지역문화 중심의 문화자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고유성이 존중되고 지역 간 소통을 기반으로 문화정책이 논의되는 정책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상시적 소통과 논의 및 토론이 가능한 정책 협력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광역지자체에 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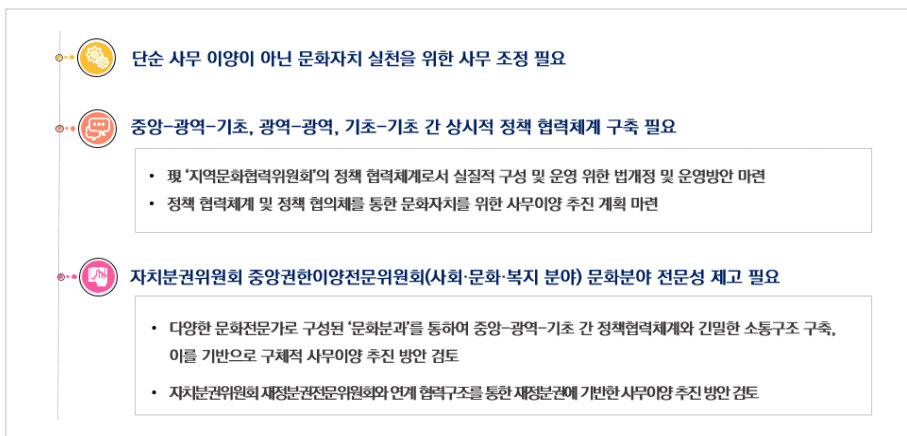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고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에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기초지자체로 확대하여 시·군·구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기능 및 역할을 심의 의결기구에서 정책 협력체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산하에 지역문화 정책협의체 등을 둘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現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정책 협력체계로서 실질적 구성 및 운영을 위한 법 개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마련된 정책 협력체계 및 정책 협의체를 통해 문화자치를 위한 사무조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 전문위원회 문화분야 전문성 제고

문화자치를 위한 사무이양에 대한 검토가 현대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전문위원회(사회·문화·복지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전문위원회 위원 중 문화분야 전문가는 2명이며, 지역문화의 다양성 및 고유성을 고려한다면 문화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다 다양한 문화전문가로 구성된 ‘문화분과’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분과에서는 중앙-광역-기초 간 구축될 문화정책 협력체계와 긴밀한 소통구조를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문화자치를 위한 구체적인 사무조정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전문위원회와 연계 협력하여 재정분권에 기반한 사무조정 추진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림 4-5] 문화자치 실천을 위한 선결 과제



자료 : 연구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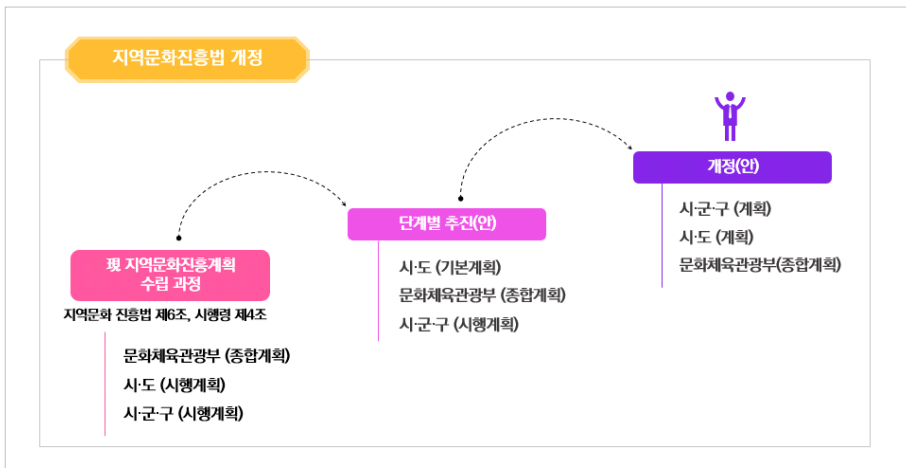
1. 실천과제

1) 법·제도적 기반 조성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문화자치 실천을 위해 무엇보다 우선 「지역문화진흥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20년 2월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이 발표되었고, 곧 제3차 지역문화진흥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2차 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토론회 등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문화자치의 본질적 차원에서 지역의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지역문화진흥계획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차 계획이 문화자치 실천의 한 과정으로서 수립되기 위해서는 현재 법에 명시된 하향식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과정이 상향식으로 전면 개정되어야 한다. 문화자치에 기반한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시·군·구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하여 시·도에서 시·도 단위 계획을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도 계획을 반영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단계적 추진(안)으로 시·도에서 시·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종합계획을 수립, 이를 반영하여 시·군·구에서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림 4-6]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자료 : 연구자 재구성.

문화자치 사업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조례 제·개정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하고 문화 다양성, 문화민주주의, 자치·분권·협치 등의 가치를 반영한 문화자치 관련 법 및 조례 제·개정이 필요하다. 경기도의 경우, 2021년 7월 문화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를 제정·시행하였다. 조례에 따라 2022년 문화자치 기반 조성, 역량 강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치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문화자치’ 조례는 경기도가 유일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오산시, 화성시, 공주시 등 3곳에서 문화자치 관련 조례를 제정·시행 중이다.

[표 4-1] 문화자치 관련 조례 제정 현황

구분	조례명	제정일	주요내용
경기도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2021. 7.14	• 문화정책 기본원칙,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 문화자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화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오산시	「오산시 문화자치 기본 조례」	2021. 12.23	• 문화정책 수립·시행 기본원칙,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음문화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화성시	「화성시 시민중심 문화자치 지원 조례」	2022. 1.6	• 예술지원센터 설치, 문화자치 지원계획 수립, 시민중심 문화자치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화자치 참여 시민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공주시	「공주시민 문화자치 기본조례」	2021. 12.6.	• 문화정책 기본원칙,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 문화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문화정책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main/totSrChList>” (2022.05.12. 검색).

중앙정부는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에 문화자치 관련 조항을 추가하거나 문화자치 관련 독립 법을 제정하여 국가 차원의 문화자치 사업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자치 기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

문화자치 전담기구(조직) 지정·설치

지역의 문화가치를 창출하고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문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문화자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문화자치 전담기구(조직)’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역문화진흥원’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주체적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지역 중심 문화자치 실천과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 수요에 대응하며 지역문화 주체간 협력구조를 마련함과 동시에 사업 간 연계성을 통한 상승 효과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원과 연계된 지역문화자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법적 근거를 갖는 문화자치 전담기구(조직) 출범은 문화민주주의 실현과 문화자치 실천을 통한 주체적인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의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다.

2) 지역문화재정 발굴·확보

포괄보조금 확대를 통한 재정 분권 실천⁸⁴⁾

정보람·이재원(2021)에 따르면, 지역의 문화진흥은 지역 여건이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하고 지역 내 가용자원을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를 강조하며 포괄화·상향식 접근 등을 통한 지역문화진흥 정책의 변화를 도모하며, 소액다건형, 국고보조사업의 비효율성, 지역문화정책 기반 성장 및 종합적 시각의 계획수립 경험 축적 등에 따라 지역문화정책에서 성과협약형 포괄보조 방식 도입 필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표 4-2] 지역문화 성과협약형 포괄보조 방식 도입 방안(안)

구분	주요 내용								
중앙부처 보조사업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지역문화정책 영역과 목표, 업무영역 재설계 • 생활권-도시권-광역권 전략적 접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주요 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생활권</td> <td>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내 커뮤니티 계획으로 지역 내 인프라-인력-서비스를 연계하는 계획에 대한 포괄보조를 의미하며, 중앙정부 사업목록을 메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커뮤니티 계획을 수립</td> </tr> <tr> <td>도시권</td> <td>도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과 브랜드를 형성하는 전략에 대한 포괄보조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문화적 자원(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등) 분석을 기초로하여 도시권 문화브랜드 계획을 수립</td> </tr> <tr> <td>광역권</td> <td>문화적 자원(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등), 생활환경의 유사성 혹은 연결성이 높은 자치단체 간 계획 수립에 대한 포괄보조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의 '(가칭) 지역문화권역' 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계획 혹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td> </tr> </tbody> </table>	구분	주요 내용	생활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내 커뮤니티 계획으로 지역 내 인프라-인력-서비스를 연계하는 계획에 대한 포괄보조를 의미하며, 중앙정부 사업목록을 메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커뮤니티 계획을 수립	도시권	도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과 브랜드를 형성하는 전략에 대한 포괄보조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문화적 자원(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등) 분석을 기초로하여 도시권 문화브랜드 계획을 수립	광역권	문화적 자원(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등), 생활환경의 유사성 혹은 연결성이 높은 자치단체 간 계획 수립에 대한 포괄보조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의 '(가칭) 지역문화권역' 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계획 혹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
	구분	주요 내용							
	생활권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내 커뮤니티 계획으로 지역 내 인프라-인력-서비스를 연계하는 계획에 대한 포괄보조를 의미하며, 중앙정부 사업목록을 메뉴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커뮤니티 계획을 수립							
도시권	도시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과 브랜드를 형성하는 전략에 대한 포괄보조를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문화적 자원(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등) 분석을 기초로하여 도시권 문화브랜드 계획을 수립								
광역권	문화적 자원(역사전통, 예술, 문화산업, 사회문화 등), 생활환경의 유사성 혹은 연결성이 높은 자치단체 간 계획 수립에 대한 포괄보조를 의미하며, 중앙정부의 '(가칭) 지역문화권역' 설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계획 혹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에서 실행계획을 수립								
중앙-지자체 간 협조 체계 및 재정배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시행 전 단계에서 지방정부와 사전 협의, 정례적인 상호협력체계 구축·운영 • 지역문화 성과협약형 포괄보조 프로그램 협약 대상을 특광역시, 광역도는 기초자치단체인 군 단위로 설정 • 지방자치단체의 문화 수준과 환경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문화권역 설정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자원 객관적 배분(지역특성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자료 : 정보람·이재원(2021). 『지역문화 성과협약형 포괄보조 방식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84) 정보람·이재원(2021). 『지역문화 성과협약형 포괄보조 방식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또한, 정보람·이재원(2021)은 지역 문화정책에서 중앙정부가 기획하고 지방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하향식 재정배분의 한계를 개선해야 하며,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기획을 중앙과 지자체가 협력하는 기능공유 체제로 전환해야 함과 동시에 향후 지방이양, 포괄보조금 사업 등에 대하여 지자체별 실제 예산편성 및 집행 현황, 보완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 방안 등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재정 조성

지역문화기금 운영 사례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 1982년 문화적 낙후지역을 지원하는 ‘문화특별교부금’을, 영국은 2018년 지역간 문화적 형평성을 위한 ‘문화 발전 기금’을 설치하는 등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특별재정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임의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및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2022)는 지역문화재정 확충 방안으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①항 임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역문화기금은 2018년 기준 광역 2곳, 기초 45곳에서만 설치·운영 중⁸⁵⁾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법의 임의 규정이 강행 규정으로 개정된다면,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가 확대될 것이며, 이로써 지역문화재정 기반 강화를 통한 지역 문화자치 실천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를 통한 문화재정 확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중심 문화자치의 지속적 실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재원 확충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재원확보로 자율적인 지역 문화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한 문화사업 예산 확보로 지역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지역문화진흥 정책 및 사업추진도

85) 문화체육관광부(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

가능할 것이다.

유사 사례로, 부천 문화도시 ‘시민기획사업(문화참여예산제)’, 청주 문화도시 ‘시민 예산제’, 강릉 문화도시 참여예산제 ‘작당모의’, 완주 문화도시 ‘완주시민문화배심원단’ 등 문화도시 사업 중 주민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하여 문화자치 실천으로써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정 민주주의 사례 등이 있다.

3) 향유의 대상에서 문화주체로의 전환

문화주체 발굴 및 참여 확대 기반 조성

문화자치의 핵심 주체인 시민들의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활동과 참여를 끌어내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라운드테이블, 공론장, 원탁회의, 시민협의체 등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문화자치를 공론화하고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의견수렴의 장 및 참여 주체간 상시 협력과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운영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사 사례를 살펴보면, 청주 문화도시의 경우 모바일 앱을 활용한 시민 커뮤니티 문화 플랫폼 ‘클레이’를 운영할 예정(2022.7)이다. ‘클레이’는 2016년 출범한 1세대 커뮤니티 ‘문화10만인클럽’과 2020년 2세대 ‘문화도시 멤버십’을 기반으로, 시민 누구나 문화 소비자이며 동시에 생산자로서 문화정보 검색, 콘텐츠 업로드, 온·오프라인 동호회 활동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구축한 플랫폼이다.⁸⁶⁾

서귀포 문화도시의 경우, 시민 소통 플랫폼 ‘문화도시 서귀포 멤버십’을 통해 문화시민 소통·공유 공간 무료 대관, 문화협약 마을라운지 이용, 문화예술 정보 소식 공유, 멤버십 행사 및 문화 이벤트 초대, 문화도시 관련 사업 참여 기회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⁸⁷⁾

시민력, 문화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문화자치 실천의 중요한 주체인 시민의 기본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문화시민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시민 스스로 문화를 기획하고 문화활동을 주도할 수 있도록 문화시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도 필요할 것이다.

문화시민으로서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의 주체로서 문화시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례를 살펴보면, 강릉 문화도시의 경우 창의적인 지역 콘텐츠 발굴 및

86) “청주 문화도시센터 “이것이 ‘클레이’입니다””, 충청일보(2022.6.26.).

87)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 “<https://www.nojiculture.kr/space/membership.do>” (2022.4.5 검색).

창출을 통한 지역 브랜드 창생을 목적으로 분야별 로컬콘텐츠 전문가와 시민 거버넌스가 함께 하는 로컬콘텐츠 연구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모임 활동 관련 교육 및 워크숍 등을 진행한다. 또한 로컬콘텐츠 연구·개발 및 관련 시제품 제작을 추진한다.⁸⁸⁾

김해 문화도시의 경우, 워킹그룹, 지원조직, 시민 등이 참여하여 문화도시 의제에 대해 함께 설계하고 연구하는 사업인 ‘문화도시 R&D’를 운영하고 역사를 주제로 문화도시의 미래가치를 발굴하고 실험하는 시민주도형 축제 ‘고도문화프린지-와야 문화축제’를 기획·개최한다.⁸⁹⁾

의정부의 경우,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자치학교를 운영한다.

그 밖에 문화시민으로서 주민참여예산제에 적극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시민 대상 교육 및 참여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화분야 주민참여예산 확대는 지역 문화재정 확보와 더불어 시민의 문화자치 역량 제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주민자치 지원기관과 생활문화시설을 연계한 문화 분야 주민참여예산 교육 및 홍보 확대, 그리고 주민자치회 연계 공모사업 운영 등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88) 강릉문화재단(2022).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결산서”, p.6, p.19.; 강릉시(2022). “2022 주요업무 시행계획”, p.171.; 강릉문화재단 “<https://www.gncaf.or.kr/contents.asp?page=445>” (2022.6.9. 검색).

89) 김해문화재단(2022). “2021 회계연도 (재)김해문화재단 결산서”, p.11.; 김해문화도시센터 홈페이지. “https://xn-4k0bp8hs5gupibiykgb.kr/html/sub/02_01.jsp” (2022.6.9. 검색).

지역문화인력, 생활문화 활동가 등 문화인력 양성 지원

문화자치 실천을 위해 문화시민뿐 아니라,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역할도 중요하다.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역량 및 자생력 증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문화 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 문화자치 실천 확대가 필요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지역문화인력을 “지역에 대한 탐색과 필요에 의해 문화 활동 및 문화콘텐츠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변화를 촉진하고, ▲주민과 함께 다양한 사업을 기획·실행·집행하여 지역문화를 창조하며,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문성을 갖춘 문화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⁹⁰⁾.

‘2022 지역문화인력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선정 인력에 지역문화시설 근무와 그에 따른 보수 및 복리후생 지원, 지역문화인력 주도적 프로젝트 기획·운영, 지역문화인력 간 협력망 형성 및 상호학습을 위한 네트워킹, 교육 콘텐츠/전문가 멘토링/현장 워크숍 참여 기회 제공 등을 지원한다.

[표 4-3] 2022 지역문화인력 지원사업 개요

구분	주요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문화 관련 전공자 또는 경력자 대상 지역 내 문화기관(시설) 및 민간문화단체의 일 경험 기회 제공하여 근무기간 동안 해당 지역 탐색, 지역문화인력으로 성장, 지역 내 문화 인적자원 발굴 및 육성, 자생적 문화생태계 선순환 구조 형성을 통한 문화역량 강화 등 도모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젝트) 지역문화인력 주도적 프로젝트 기획·운영비 지원(300만 원) (네트워킹) 지역문화인력 간 협력망 형성 및 상호학습 위한 네트워킹비 지원(50만 원) (역량강화 통합지원) 교육 콘텐츠, 전문가 멘토링, 현장 워크숍 참여 기회 제공 등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22.2.25.). “2022 지역문화인력(신규) 공모 안내문”.

‘202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전남문화기획학교’는 역량강화 교육·실습·네트워킹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특화형 문화인력을 양성을 추진한다.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에 관심을 갖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문화 확산 및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촉진활동을 수행하는 활동가 양성은

90)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22.2.25.). “2022 지역문화인력(신규) 공모 안내문”.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자원(인적, 공간, 문화 콘텐츠 등)을 공유하고 이들의 매개 활동 역할을 수행할 지역문화전문인력은 지역문화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경주시와 경주문화재단의 경우, 시민이 ‘시민축제학교’를 통해 시민 문화활동가로서 ▲일상문화, 생활문화, ▲거리예술, 다원예술 2개의 과정에 대한 기초교육과정, 시범사업, 실행과정을 수료하고 프로젝트 실행비를 지원받아 거리예술축제인 실크로드 페스타에서 시민 제안 콘텐츠를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⁹¹⁾.

[표 4-4] 전남문화기획학교(2022) 개요

구분	주요내용			
문화인력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사업과 지역문제해결에 관심이 많은 로컬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완도 섬마을 청년 우연한 기회로 구례에 방문했다가 전남에 빠져 정착한 예술인 전남에 살지 않지만 전남 지역에 관심이 많아 지역 활동가를 만나고 싶은 대학생 곡성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은 예비 문화기획자 농업이 생업이지만 자신의 마을이 예술로 아름다워지길 바라는 해남의 농부화가 어머니 			
추진방향	비전	‘지역을 구체적으로 바라보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 안착화		
	교육목표	지역문화 이해도 제고	지역 안착 기반마련	일거리 창출 역량 개발
	교육방향	1.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2. 지역기반 네트워크 형성	3. 현장 중심 과정설계
		4. 문제 해결능력 강화	5. 맞춤형 전문가 매칭	6. 지속성장 지원
	성과목표	44명 중 35명 이수	22개 사군 두루두루 배정 이 1명 이상 전문인력 양성	22개 Project 기획발굴
지속가능한 전남형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체계 마련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지역 안착		

자료 : 전라남도문화재단(2022.5.4.). “‘전남문화기획학교’ 2기 교육생 모집”.

91) “경주시, 49회 신라문화제-실크로드 페스타 ‘시민축제학교’ 수강생 모집”, 경북신문(2022.5.30.).

4) 주체적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지역문화는 다양성과 장소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지역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체적 지역문화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문화자치 실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문화정보 DB 구축, 문화자치 정책마켓, 지역문화 매개 전문인력 활동 등에 대한 검토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역별 지역문화 정보 시스템 기초 데이터 구축·운영

중앙정부에서는 지역문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지역 간 문화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개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역문화 관련 시설, 인력, 사업 등의 지역문화정보를 한 곳에 모으고 표준화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지역별 문화정보 기초 데이터 수집 및 관리와 공유를 위한 기초지자체별 지역문화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문화자치 정책마켓·정책박람회 개최

시민이 직접 발굴하고 제안한 지역 의제 및 정책이 공유되고 실현화될 수 있도록 시의회, 유관부처 및 기관, 시민명역 등 지역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문화정책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는 시·군 간 우수정책을 발굴하여도 전체로 확산하는 정책소통의 장으로서 ‘경기도형 정책마켓’⁹²⁾을 운영한다. 전남 순천시의 경우도 별량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청소년이 참여하는 정책마켓⁹³⁾을 개최한다.

지역문화 매개 전문인력 활동지원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활동 기반을 다진 지역문화 전문인력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92) 경기도 홈페이지,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ldx=1340&menuld=2954>” (2022.00.00 검색).

93) “순천시 별량면, ‘청소년 마을계획단’ 정책마켓 운영”, 남도경제신문(2021.7.1.).

있을 것이다. 지역에서 운영·지원하는 문화시설에 지역 내 ‘지역문화인력 양성 지원’ 프로그램 이수자의 배치를 지원하여 문화인력의 지역 내 지속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2022 지역 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지역의 자율적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중앙정부가 지역을 대상으로 직접사업을 추진하기 보다, 지역이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요구하는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 사업’으로 확대함으로써 문화자치 실천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05

결론

제1절 | 연구요약

제2절 | 정책제언

제1절 연구요약

중앙정부는 「문화기본법」과 「지역문화진흥법」을 기반으로 수립한 ‘문화비전 2030’, ‘새 예술정책(2018-2022)’,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20-2024)’ 등의 정책 및 계획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문화분권과 문화자치를 표방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해 사회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가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인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 중심의 문화발전이 아닌 지역 중심의 문화발전이 곧 국가 문화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모두 인식하고,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중앙집권 문화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경기도의 경우 탐색기(2017~2018), 준비기(2019~2020), 태동기(2021~2022)에 걸쳐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탐색기와 준비기를 거쳐 현재 태동기에 있는 경기도는 지난 2021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문화자치 추진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2년 조례에 기반한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태동기는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자치 실천 기반을 경기도에서 주체적이며 자율적으로 먼저 마련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의 문화자치 추진 과정은 문화자치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하여 필요한 실천과제를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문화정책 및 사업 관련하여 결정과 집행과정에 시민이 주체로서 자율성, 독립성, 책임성을 가지고 참여하여 지역의 문화주권을 회복하고 문화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문화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이 중앙 혹은 지방정부에 의해 획일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문화자치는 다양한 지역에서 지역민에 의해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문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이 이루어질 때 실현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렇듯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주체가 될 때 지역문화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된다. 한 예로 독일의 대표적인 주체적 지역문화 사례로 많이 언급되는 곳이 베를린에 있는 쿨투어브라우어라이(Kulturbrauerei, 문화양조장)이다. 지역민이 주체적으로 시의회 및 토지소유주인 기업과 협의를 통하여 폐쇄된 맥주양조장을 문화양조장으로 탈바꿈하여 명소가 됨으로써 지역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는 곳이다. 행정이나 전문가가 문화재생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주체적으로 지역문화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문화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 중심 문화자치 실천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와 시민 간 수평적 협력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형식적 행위로서 사무이양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지역의 필요와 요구에 따른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조정, 상시적 정책협력체계 구축과 자치분권위원회 중앙권한이양전문위원회(사회·문화·복지 분야)의 문화분야 전문성 제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자치는 자치분권의 여러 분야의 사무로써 문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경기도 문화자치 기본조례」 제3조(정의)에서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듯이, 자치분권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지역문화를 직접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삶의 과정으로서 문화자치라고 이해해야 한다.

문화자치를 자치분권의 대상으로서 사무이양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본연의 의미로서 문화자치는 퇴색하게 될 것이다. 문화자치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지속성, 그리고 지방분권이 담보되어야 하겠지만, 지방재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또 지방분권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문화자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화자치는 지역중심의 주체적 문화생태계 구축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 설정되는 지방분권 혹은 지방재정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자치를 위한 실천과제로 ▲법·제도적 기반 조성, ▲지역문화 재정 발굴·확보, ▲향유의 대상에서 문화주체로의 전환, ▲지역 중심 문화생태계 구축을 제시하고자 한다. 법·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문화자치 관련 법·조례의 제·개정을 통한 문화자치 사업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문화자치 전담기구(조직) 지정·설치, 상시적 정책 협력체계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문화재정 발굴·확보를 위해서는 포괄보조금 확대를 통한 재정 분권 실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확대를 통한 지역문화재정 조성,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문화재정 확보 등이 필요하다.

향유의 대상에서 문화주체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문화주체 발굴 및 참여 확대 기반 조성, 시민력·문화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역문화인력·생활문화 활동가 등 문화인력 양성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지역 중심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별 지역문화 정보 시스템 기초 데이터 구축·운영, 문화자치 정책마켓·정책박람회 개최, 지역문화 매개 전문인력 활동 지원 등이 필요하다.

제2절 정책제언

중앙정부

중앙정부는 문화자치, 문화분권 관점에서 법 제도 및 재정 구조 개편을 통해 지역문화정책 의사결정 및 추진 방식을 상향식(bottom up)으로 전환해야 한다. 지역의 특수성과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및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개정을 통해 상향식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을 규정해야 한다. 또한 법 개정을 통해 광역 단위뿐만 아니라 기초 단위의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 기능 강화와 상시적인 소통구조를 마련해 중앙-광역-기초 간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중앙, 광역, 기초자치단체간 합리적 역할 분담과 공감대 형성을 우선 추진해야 하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협력자, 매개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직접사업의 경우 필요한 경우만 시행하고, 지역간 문화재정 격차 완화를 위한 재원 발굴·확보 방안을 마련하며, 중앙정부-지역 간 파트너십을 통한 협력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국가 단위 조사·통계·평가·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자율적인 지역문화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와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재하고 연결하는 매개자로서 기능이 필요하며, 관할 기초자치단체간 문화적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와 정례적인 협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적 여건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문화진흥계획 수립시 기초자치단체 지역문화진흥 계획이 먼저 수립되고 이를 연계·반영하여 중앙정부에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간 상호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과잉 경쟁을 최소화하고, 자원 공유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각 지역 간, 기관 간 분절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협력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사업 추진, 기초자

치단체 문화 관련 정보 아카이빙 및 공유, 문화자치 우수사례 공유, 시설 및 인력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생활권 단위에서 지역사회 및 주민과 직접적 관계를 맺는 주체이다. 지역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이 문화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즉, 지역 주민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이고 그 권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문화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자치를 공론화하고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 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 지역 문화환경 개선, 문화주체로서 역할을 위한 시민력·문화력 제고 지원 등의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내 문화정책 및 사업 관련 이해관계 조정, 지역문화 전문인력 발굴 및 양성, 민관 협력형 로컬 거버넌스 구축을 지원하고 문화자치에 대한 지역의 이해와 함께 문화자치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역 차원의 실천과제를 마련해야 한다.

경기도

경기도는 문화자치 기본 조례 제정·입법 예정인 3개 시·군을 제외한 28개 시·군에서 문화자치 관련 조례 제정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특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상향식 문화자치 기본계획 수립, 경기도-31개 시·군간 문화자치위원회의 상시적인 소통 및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2022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컨설팅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차년도 사업방향 구상 및 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강릉문화재단(2022). “2021년도 강릉문화재단 결산서”.
- 강릉시(2022). “2022 주요업무 시행계획”.
- 강릉문화재단. “<https://www.gncf.or.kr/contents.asp?page=445>” (2022.6.9. 검색).
- 강릉시문화도시지원센터 시나미강릉. “<https://sinami.co.kr/sub/culture/culture01.html>” (2022.2.15. 검색).
- 경기도. “<https://www.gg.go.kr/contents/contents.do?cidx=1340&menuId=2954>” (2022.5.10. 검색).
-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2021). “업무보고서”.
- 경기문화재단(2021). “2021년 주요 업무보고”.
- 경기문화재단 내부자료. “2021년 경기 문화예술 정책축제 1차 모임 결과”.
- “〈경기 문화예술 정책축제〉 정책 제안 영상공모”, 경기문화재단 공고 제2020-226호 (2020.9.16.).
- 경기 문화예술 정책축제(2021.10.26.) – You Tube (2022.3.17. 검색).
- “경주시, 49회 신라문화제-실크로드 페스타 '시민축제학교' 수강생 모집”, 경북신문(2022.5.30.).
- 권영성(2010). 『헌법학원론』, 법문사.
- 김선미·최준식(2012). “프랑스 문화정책 준거의 발전과 문화의 민주화”, 『인문학연구』, 21:139-173.
- 김성하 외(2018). 『광명시 발전 전략 연구 : 삶의 질 제고를 중심으로』, 경기연구원.
- 김성하 외(2018). “문화자치, 패러다임 전환과 경기도 첫 발”, 『이슈&진단』, 경기연구원.
- 김성하 외(2019).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2020~2024)』, 경기문화재단.
- 김순은(2021).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성과와 과제”, 『지방행정연구』, 35(4):3-36.
- 김순은·주희진(2021). “자치분권 2.0의 개념과 주요 특징”, 자치분권위원회.
- 김해문화재단(2022). “2021 회계연도 (재)김해문화재단 결산서”.
- 김해문화재단(2022). “2022년 주요업무계획”.
- 김해문화도시센터. “https://xn-4k0bp8hs5gupibiykgb.kr/html/sub/02_01.jsp” (2022.6.9. 검색).
- “도, 도민과 함께하는 문화자치 본격 추진…활성화 사업 시군 공모”, 경기도 보도자료 (2022.2.7.).

문화도시 부천. “<http://sweb.smartnm.gethompny.com/subpage.php?p=m13>”, (2022.1.10. 검색).

문화도시부천 도시플랫폼B. “<https://bccp.bcf.or.kr/content.do?key=m2201117570047>” (2022.6.15. 검색).

문화도시 부평. “<https://www.bpcf.or.kr/ccity/ccity/introduce.asp>” (2022.2.17. 검색).

문화도시 서귀포. “<https://www.nojiculture.kr/introduce/structure.do>” (2022.1.10. 검색).

문화도시 영도. “<http://ydct.or.kr/>” (2022.2.3. 검색).

문화도시 원주. “<https://www.xn-2j1bz8hx3nt7b.kr/main.php>” (2022.2.4. 검색).

“「문화비전2030-사람이 있는 문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17.12.07.).

“「문화자치 활동, 지역주민과 함께 펼쳐요!」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모 결과 양주시 등 5곳 선정”, 경기도뉴스포털(2022.3.24.).

문화체육관광부(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2024)”.

문화체육관광부(2021).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2021). “2022년 주요업무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1년 문화도시 성과”.

문화체육관광부(2022). “2022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새문화정책준비단(2018).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체육관광부·새예술정책수립특별전담팀(2018). “새 예술정책(2018-2022)”.

문화체육관광부·지역문화진흥원(2022). “2022 지역문화인력(신규) 공모 안내문”.

부천문화재단(2021.6). “제252회 부천시의회(제1차 정례회)-주요업무 추진실적(2020~2021)”.

부천문화재단(2022). “2022년 주요 업무계획”.

부평시의회(2021). “제247회 2022년 예산안 검토보고서”.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https://www.nojiculture.kr/space/membership.do>” (2022.6.9. 검색).

손상식(2017).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의미”, 『서울법학』, 24(4):91-133.

“수원시, 정부의 3차 예비문화도시 지정에 발맞춰 '문화도시 행정협의체' 발족”, 한국경제신문 (2021.6.22.).

“순천시 별량면, '청소년 마을계획단' 정책마켓 운영”, 남도경제신문(2021.7.1.).

- 영도구(2021). 『2021 영도구 구정백서』.
- 영도구(2022). 『2022 주요업무계획』.
- 영등포(2021). “[공유자료] 문화도시 조성계획”.
- 오산문화자치 블로그. “<https://blog.naver.com/cfosan>” (2022.5.10. 검색).
- 완주군(2022). “2022 군정계획”.
- 완주문화재단(2021). “2021 완주문화재단 연차보고서”.
- 원도연(2008).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의미와 차기 정부의 과제”, 『경제와 사회』, 79:156-183.
- 원용진(1999). “‘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문화과학』, 17:181-203.
- 이영준(2020.10). “[이슈] 문화도시 정책과 문화민주주의”, 『문화정책이슈페이퍼』, 부산문화재단.
- “익산시, 문화도시 행정협업체 사전 설명회”, 전북도민일보(2021.3.17.).
- 인천광역시 부평구(2022). “2022년 주요업무계획”.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main/totSrchList>” (2022.5.12 검색).
- 자치분권위원회. “<https://pcad.go.kr/section/content/content.html?PID=role>” (2022.1.20. 검색).
- “전남문화기획학교’ 2기 교육생 모집”, 전라남도문화재단(2022.5.4.).
- 정보람 외(2020). 『지방분권에 따른 문화재정 현황과 정부간 역할분담 방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정보람·이재원(2021). 『지역문화 성과협약형 포괄보조 방식 도입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부천)문화도시 조성계획(공개용)”, 문화체육관광부(2020.6.4.).
-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서귀포)문화도시 조성계획(공개용)”, 문화체육관광부(2020.6.4.).
- “제1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청주)문화도시 조성계획(공개용)”, 문화체육관광부(2020.6.4.).
-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강릉)문화도시 조성계획(공개용)”, 문화체육관광부(2021.4.8.).
-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김해)문화도시 조성계획(공개용)”, 문화체육관광부(2021.4.8.).
-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완주)문화도시 조성계획(공개용)”, 문화체육관광부(2021.4.8.).
- “제3차 문화도시로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 익산시 등 6곳 최종 지정”,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1.12.23.).
-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경기 수원시) 제3차 문화도시조성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22.5.18.).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경남 밀양시) 제3차 문화도시조성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22.5.18.).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서울 영등포구) 제3차 문화도시조성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22.5.18.).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전남 목포시) 제3차 문화도시조성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22.5.18.).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전북 익산시) 제3차 문화도시조성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22.5.18.).

“제3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충남 공주시) 제3차 문화도시조성계획”, 문화체육관광부(2022.5.18.).

진인혜(2007). “프랑스 문화정책의 역사”, 『한국프랑스학논집』, 59:303-324.

“청주 문화도시센터 "이것이 '클레이'입니다””, 충청일보(2022.6.26.).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2022). “2022년 경영목표와 운영계획”.

춘천문화재단(2022). “2022년 춘천문화재단 경영목표”.

“춘천문화재단, “춘천의 문화 바람은 ‘시민협업체 봄바람’으로부터””, 유교신문(2022.2.24.).

춘천시(2022). “2022 주요업무계획”.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2021). “2021 행정사무감사자료”.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를 꽃피운다- 별첨2. 정보그림(인포그래픽)”,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0.2.10.).

포항문화재단(2022). “2022년 포항문화재단 주요사업계획”.

“2022 경기도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 공고문(2022-259)”, 경기도 고시·공고(2022.2.4.).

Abstract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Regional Culture Promotion Act” and “The Fundamental Act on Culture”, the cultural policy of the national government has emphasized increasingly the importance of the regional culture. These mean that the direction of the cultural policy has goals to pursue the ‘Cultural Democracy’ and ‘Cultural Autonomy’. The cultural democracy and cultural autonomy are not social or political theory, but relate to the cultural life as idea, thinking, action, activity, relationship, participation, cooperation etc. In fact, the people has the fundamental rights to the cultural life, for example creation, expression, activity, etc. The cultural policy of government must guarantee, by law and in practical life, these fundamental rights. The culture is not abstract concept in a unified nation, but real life in different regions. So, the cultural policy of the national government has no choice but to accentuate the promotion of the regional culture.

It is, therefore, very important that every regions are, autonomically, creating and making the regional culture. That is exactly what the cultural autonomy and the cultural democracy mean.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meaning and practical aspects searching the examples of the cultural autonomy and the cultural democracy.

Keyword Cultural Democracy, Cultural Autonomy, Regional Culture, Cultural Life

부록 1. GRI 문화예술 정책 포럼(2018)

1. 기획회의

구분	주요 내용	
1차	일시 / 장소	• 2018. 1. 16(화) 15:00 / 경기연구원 11층 회의실
	참석자	• 경기연구원, 문화재단 등 11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럼 부제(안) : '문화자치,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 ※ 포럼 및 토론회별 개별 부제 선정 가능 ※ 준비모임(2018..1.23)에서 최종 선정 예정 • 1차 포럼 주제 : 문화자치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 관계 및 역할 • 기획회의 (매월 셋째 화요일 15:00, 경기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대상 : 경기연구원, 문화재단 정책 담당자 등 - 주요안건 : 지역 토론회 구성 및 운영방안, 토론회-포럼 연계방안, 경기도 문화예술 정책 의제 발굴 등
2차	일시 / 장소	• 2018. 2. 20(화) 15:00 /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 3층 세미나실
	참석자	• 경기연구원, 문화재단, 문화원,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총 15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제(안) : 문화자치를 위한 각 기관, 주체의 기능 및 역할 - 토론주제 : 문화자치를 위한 기관·단체 역할, 지속가능한 예술인 협동조합 운영 방향, 예술정책 정립 방향 등 • 1차 지역 토론회(예정) : 3월 중순 이후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 민선7기 경기도 정책의제 발굴(경기도 문화예산 3~3.5% 확보 등) • 3차 기획회의 안건 : 2차 지역토론회(4월) / 민선7기 경기도 정책의제 발굴 / 포럼, 지역토론회 등 전반적 사항 / 기타의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및 장소 : 2018.3.13.(화) 15:00 /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 - 안 건 : 2차 지역토론회(4월) / 민선7기 경기도 정책의제 발굴 / 포럼, 지역토론회 등 전반적 사항 / 기타의견 등
3차	일시 / 장소	• 2018.3.13.(화) 15:00 / 경기도연구원 7층 대회의실
	참석자	• 경기연구원, 문화재단, 문화원 등 총 12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변경 : 지역토론회 → 2018 제0차 GRI 문화·예술 정책포럼 • 2018 제1차 종합포럼 : 2018.2.28. 개최 예정 • 2018 제2차 GRI 문화·예술 정책포럼 : 화성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 : 2018.3.28(수), 14:00 / 장소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 주제 : 문화자치를 위한 화성시 문화·예술 관련 기관 간 관계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 문화·예술정책 방향(생활문화 정책을 중심으로) - 제4차 기획회의 안건 : 3차 포럼 개최 / 경기도 정책의제 발굴 / 자유토론 / 기획회의 운영 관련 사항 / 기타의견 등

구분	주요 내용	
4차	일시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4.17.(화) 15:00 / 경기도연구원 7층 대회의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연구원, 문화재단, 문화원, 관계 공무원 등 12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제3차 GRI 문화·예술 정책포럼 : 이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단이 없는 지역의 문화역량 네트워크를 통한 논의구조 마련 - 포럼 연속성 차원에서 발제에 2차 포럼 요약·정리 포함(화성시문화재단) - 이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의견을 토론 안건 중 하나로 상정 - 일시 및 장소 : 2018.5.9(수) 14:00, 에덴파라다이스호텔 사랑2미팅룸 • 5차 기획회의 안건 : 제3차 포럼 결과 공유 및 향후 포럼 개최 계획/경기도 정책의제 발굴/ 기타의견 등
5차	일시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5.15.(화) 15:00 / 경기도연구원 7층 대회의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연구원,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기획자 등 9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회의 내 토론의 장 운영 (6차 기획회의부터 운영 / 주제 : 가격vs가치) • 6차 기획회의 안건 : 향후 포럼 개최 계획 / 경기도 정책의제 발굴 / 현장에서의 문화정책 사례 공유·토론(가격vs가치) / 기타의견 등
6차	일시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6.19.(화) 15:00 /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연구원, 경기도,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기획자 등 15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주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행정기관, 정량평가 위주의 현 경영평가 방식 변화 필요 / 문화기획 역할 지원 필요 / 문화행정기관 관료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성, 책임성 제고 필요 / 직접지원 보다 간접지원, 사회적 자본화 필요 -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 마련과 획일적 기획사업 공모 방식 변화 필요 • 7차 기획회의 토론 주제 : 경기문화재단에서 그리는 지역 문화예술 • 제4차 포럼 개최안 (향후 일정 및 주제 조율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8월 중 / 주제(안) : 경기도 문화생태계에서 기획자 역할 등 • 8차 기획회의 안건 : 향후 포럼 개최 계획(제4차, 제5차 등) / 경기도 정책의제 발굴 /현장에서의 문화정책 사례 공유·토론, 기타의견 등
7차	일시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7.17.(화) 15:00 / 경기도연구원 11층 대회의실
	참석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연구원,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기획자 등 13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 주요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문화재단 지역 문화예술정책 키워드 : 공간, 사람, 콘텐츠, 네트워크 - 문화예술 거점 공간 발굴 및 네트워크, 문화예술 협력주체 발굴 및 네트워크, 생활문화 정책 추진 필요, 광역-기초간 협력관계 구축 필요 • 8차 기획회의 토론 주제 : 문화원에서 그리는 지역 문화예술 • 제4차 포럼 개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2018.9.20.(목) / 주제(안) : 부천시,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 • 제5차 포럼 개최안 (향후 일정 및 주제 조율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10~11월 중 /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연계 방안 논의 • 8차 기획회의 안건 : 향후 포럼 개최 계획(제5차, 제6차 등) / 경기도 정책의제 발굴 / 현장에서의 문화정책 사례 공유·토론 / 기타의견 등

구분	주요 내용	
8차	일시 / 장소	• 2018.9.4.(화) 15:00 / 경기도연구원 7층 대회의실
	참석자	• 경기연구원, 경기도의회, 관계 공무원,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기획자 등 16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토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단, 지역문화 정책 기조 및 지원 구조 마련과 지역 문화예술 관련 기관 직접사업 운영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필요 - 지역 문화예술 관련 기관간 지속적 연계협력 위한 네트워크 필요 • 9차 기획회의의 토론 주제 :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 개념 • 제4차 포럼 개최 안내 (부천,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2018.9.20.(목) 10:00 / 복사골문화센터 2층 갤러리 • 제5차 포럼 개최안 (향후 일정 및 주제 조율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11월 / 장소 미정(성남문화재단 섭외) / 성남문화재단, 경기연구원 예산 공동 부담 / 주제(안) : 조율 중 • 10차 기획회의의 안건 : 향후 포럼 개최 계획(제5차, 제6차 등) / 경기도 정책의제 발굴 / 현장에서의 문화정책 사례 공유·토론 / 기타의견 등
9차	일시 / 장소	• 2018.10.16.(화) 15:00 / 경기연구원 11층 회의실
	참석자	• 경기연구원, 관계 공무원, 문화재단, 문화기획자 등 15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도 기획회의 및 포럼 운영(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회의의 개최 : 현재와 동일하게 매월 둘째주 화요일 15:00 개최 - 기획회의 및 포럼 주제 :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 등 큰 축을 가지고 진행 • 주요 토론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편적 예술교육, 재능 발굴·육성 위한 특정 교육 구분 진행 필요 - 관계자 간 연계협력 할 수 있는 기반 조성 필요(예: 성남형교육지원단) - 문화예술교육의 긍정적 사례 발굴 확산 필요 - 학교 내 공간 재구조화를 통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필요 • 제5차 포럼 개최안 (향후 일정 및 주제 조율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정 : 12월 3일 / 장소(미정) / 주제(안) : 성남시,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 - 문화·예술로 지역에서 살아가기 • 11차 기획회의의 안건 : 향후 기획회의 및 포럼 운영계획 / 경기도 정책의 제 발굴 / 현장에서의 문화정책 사례 공유·토론 / 기타의견 등
10차	일시 / 장소	• 2018.12.18.(화) 15:00 / 경기연구원 11층 회의실
	참석자	• 경기연구원,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기획자 등 21명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기획회의의 : 매월 세 번째 주 화요일 오후 3시 / 포럼 관련 소주제 발제, 토론 진행 • 2019년 포럼 운영 방식(안) : 분기별 운영 / 문화예술 정책 현안이 유사한 지역을 묶어서 개별 포럼 진행 후 연말에 종합포럼 진행 • 2019년 GRI 문화예술 정책포럼 주제 키워드 (경기도 문화정책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복지 / 문화기획자, 문화예술 매개자 / 문화 기본선 / 문화예술교육 / 지역 문화예술 네트워크 / 생활문화 / 지역화폐 / 젠더 이슈 등 • 2019년 1차 기획회의의 : 2019.1.22.(화) 15:00, 경기연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안건 : 포럼 및 기획회의의 세부 운영 방안, 포럼 주제(이슈) 논의 등

2. 시·군 정책포럼

구분	주요 내용	
1차	일시/장소	• 2018. 2. 28(수) 14:00 /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
	참석자	• 70여명(경기연구원 도 및 시·군 관계 공무원 문화재단 문화원 예술, 민예총 등)
	주제	• 문화자치를 위한 경기도와 시·군 관계 및 역할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자치를 위하여 광역은 Facilitator 역할(지역문화진흥+정책실현촉매제), 기초는 coordinator 역할 (매개자·조정자, 사업실행(현장)) 필요 • 지속가능 문화예술 생태계를 위한 협동조합 활성화 필요 • 시민 중심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운영과 자생력 확보 위한 정책 방향 수립 필요 • 유사 법률간 통폐합, 협동조합 지원 근거 마련 등 문화예술 법안 개선 필요
2차	일시/장소	• 2018. 3. 28(수) 14:00 / 화성시생활문화센터 교육실
	참석자	• 화성시,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
	주제	• 30여명(경기연구원, 관계 공무원, 문화재단, 전문가, 시민단체 등)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 협치·거버넌스 활성화, 공정한 예산배분, 적극적인 시민 참여 유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다양성을 반영하는 토론의 장 마련 필요 • 향후 화성시 내 네트워크 운영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 내 네트워크 주제 참여로 ‘열린 토론회’ 개최(연 1~2회), 공동의제 도출, 대안 협의, 성과 공유와 더불어 시정 반영까지 추진
3차	일시/장소	• 2018. 5. 9(수) 14:00 / 에덴파라다이스호텔 카페동 사랑2미팅룸
	참석자	• 30여명(경기연구원, 관계 공무원, 문화재단, 전문가, 시민단체 등)
	주제	• 이천시,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가 자생력 강화를 위한 예술 수요 증대 필요 • 시민이 직접 만드는 축제/행사 지원 필요 • 이천시 내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과 문화예술 사업 방식 변화 필요 • 새로운 마을 단위, 공동체이자 지역문화의 모델이 되는 자발적 시민모임 발굴·활성화 지원 필요
4차	일시/장소	• 2018. 9. 20(목) 10:00 / 부천시 복사골문화센터 2층 갤러리
	참석자	• 50여명(경기연구원, 관계 공무원, 문화재단, 전문가, 시민단체 등)
	주제	• 부천,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인 발굴, 육성과 지원 정책 참여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생활문화와 전문예술의 차이에 대한 논의 과정 필요 • 문화·예술 정책 수혜 대상에 있어 부천형 범위 구축 필요 • 부천시 내 문화예술기관·단체 간 정례 모임을 통한 구체적 성과 도출 필요성 공감과 공동 의제 도출·논의 필요

구분	주요 내용	
	일시/장소	• 2018. 12. 3(월) 15:00 / 성남문화재단 컨퍼런스홀
	참석자	• 30여명(경기연구원, 관계 공무원, 문화재단, 전문가, 시민단체 등)
5차	주제	• 성남, 우리가 만드는 지역문화 - 문화예술로 지역에서 살아가기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이 결여된 현 문화예술 지원 시스템 개선 필요 • 부족한 문화예술 분야 창업 관련 컨설팅 지원 위한 전문 역량 풀 확보 필요 • 소통의 장을 통한 관계자 간 교류 필요 • 지역 문화예술 관련 정보 축적, 공유 필요 • 문화예술 창업 지원 조례안 관련 의견 :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 후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성 담보를 위한 내용 포함 필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필요,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 기초조사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기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창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 필요, 문화예술 창업 공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반영 필요 등

부록 2. GRI 문화예술 정책 세미나 및 포럼(2019)

1. 정책 세미나

구분	주요 내용	
1차	일시/장소	• 2019.1.22.(화) 15:00 /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
	참석자	•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기획자 등 19명
	주제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과제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분야 분권, 자치를 위한 실천적 방향 논의 구체화 필요 • 공공의 역할을 하는 민간 영역에 집중된 지원 확대 필요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제도, 계획의 선제적 수립 필요 • 경기도 내 다양한 논의구조, 협업구조 마련 필요 • 지역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모델 구축 및 지원 필요
2차	일시/장소	• 2019.2.19.(화) 15:00 /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
	참석자	•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기획자 등 17명
	주제	• 예술가 지원 정책과 예술가의 지위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정의 및 범위가 정책적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물음을 바탕으로 한 규정 필요 • 예술가로서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확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 활동, 전시·공연 위한 업무 등에서 오는 심리적 소진, 산재 치료비, 자주적으로 창작, 전시·공연 등을 할 수 있는 공간 등 • 예술인 기본소득 추진을 위하여 예술인에 대한 범주 규정 / 목적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 /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 관점 접근 등 필요
3차	일시/장소	• 2019.3.26.(화) 15:00 /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
	참석자	•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기획자 등 17명
	주제	• 프랑스의 예술인 지원정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 분야별 단체·협회를 통한 예술인 지원과 관계 기관간 역할 분담, 수평적 관계로 예술인 지원정책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문화통신부) : 창작 환경 조성, 배경 및 제도적 기반 마련, 단체 지원, 전문가 양성 위주 예산 편성 - 지방자치단체 : 창작공간, 창작비용, 전시 관련 정보 전달 등을 지원 하며 문화향유 및 문화창작 지원에 많은 예산 편성 - 지방문화사무국(drac) : 욕구 및 필요를 파악, 네트워크 형성 등 • [한국] 예술인 지원 기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기업 매칭 지원, 예술인자격증명 등 프랑스 예술인 지원 정책과 유사 지원 수행 중 • [한국] 예술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토론의 장 마련 필요, 특히 행정기관의 예산 수립(7~8월) 전 다양한 이해관계자간 토론의 장 필요

구분	주요 내용	
4차	일시/장소	• 2019.4.16.(화) 15:00 /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
	참석자	•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기획자 등 19명
	주제	• 독일의 예술인 지원정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연방정부 소속의 독일연방미디어처(BM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업무 분야는 1) 국가의 대표성, 2) 예술과 문화의 계발을 위한 기획 재정정책 수립, 3) 국가적 중요 문화기관 및 프로젝트 지원 4) 문화유산 보존 및 보호 5) 대외문화정책 6) 역사외식 고양 7) 국가수도 베를린 지원 등 • [독일] 독일 문화정책 기조는 주정부 관할 문화 정책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 문화정책이 주정부 소관으로 운영되도록 명시 - 주정부별 운영을 위하여 문화기금, 재단 설치를 기조로 하고 있음 • [독일] 연방정부 예술인 지원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기금 마련 / 해외 장학금 지원 / 음악가 지원 / 예술인 사회보장제 등 • 독일 예술인 지원정책을 통한 시사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지역(주정부)에 문화정책,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대한 운영 및 자율성 보장과 더불어 중앙(독일연방정부)은 문화예술분야에필요한 지원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며 후원 - 독일은 특정분야에 집중하지 않고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에 해당하는 재단, 기금 조성 등으로 균형있게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 - 예술인의 창작과 새로운 시도 장려를 위한 장기적, 지속적 지원
5차	일시/장소	• 2019.7.9.(화) 14:00 / 경기연구원 7층 대회의실
	참석자	•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기획자 등 17명
	주제	• 영국의 예술인 지원정책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문화예술정책을 포인트별로 4가지 시기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진흥시기(1940~1979), 예산 삭감 및 문화예술지원 위기 (1979~1997), 문화예술의 경제 및 사회적 가치 제고 시기 (1997~2000), 문화예술분야의 산업적 경쟁력 고취와 자생력 강조 시기(2000~현재) • [영국]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지역 예술위원회가 문화예술지원정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CE) : 중앙 예술지원정책 기획·실현, 창작지원을 핵심사업으로 함 - 지역 예술위원회(Area Councils) : 지역예술진흥 위한 하위위원회로 5개의 지역예술위원회(London, Midlands, North, South East, South West)로 구성,지역 수준에서 예술을 옹호하고 활동을 지원하는 향유 중심으로 사업 추진 •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에서 최근 예술인 지원 관련 법이 제정되어 사례 연구 필요

2. 시·군 정책포럼

구분	주요 내용	
1차	일시/장소	• 2019.5.10.(금) 15:00 / 고양문화재단 아람누리 아람마당
	참석자	•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기획자 등 40여명
	주제	• 지역사회에서 예술가로 살아남기! -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방향 및 지원체계 변화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양 시내 문화예술 지원 위한 컨트롤타워 필요 • 지역에서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직·간접 지원 확대 필요 (예술 간접 지원 방식 개선, 전문예술인을 위한 지원 방안(전시 공간, 창작지원금 등) 모색, 예술 시장성 제고와 예술 생태계 자생력 강화를 위한 기반 확충 등) • 문화협약 제도를 활용한 중앙-광역-기초 간 연계·협력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자원, 수단 제공 / 광역 : 지역 간 공동 프로젝트, 협업 프로젝트 활성화 지원 / 기초 : 지역 내 수요를 고려한 예술가 지원 계획 수립 • 정례적인 모임을 통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 마련으로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수요, 필요 정책·사업 등 논의 필요
2차	일시/장소	• 2019.10.8.(화) 15:00 / 과천시청 대강당
	참석자	•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문화재단, 문화원, 문화기획자 등 50여명
	주제	• 과천, 문화를 그리다
	주요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단은 독립성과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며, 과천문화재단 설립·운영에 있어 과천시민의 적극적 참여 필요 • 문화도시로서 과천을 위하여 도시 발전 전략과 함께 문화예술 정책 추진이 필요하며 문화예술을 통해 소통하고 관계맺는 도시를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천시민의 삶과 예술을 결합시켜 지역에서 정체성이 구축될 수 있도록 연계전략 마련 / 유관기관 간 소통, 협력을 통한 문화자치 기반 마련 필요 / 문화적 환경을 행정적 구조에서 구분 짓는 예술 정책 중심의 구조, 관계망을 넘어 자원화 필요(서울대공원, 서울랜드, 과학관, 경마장 등)